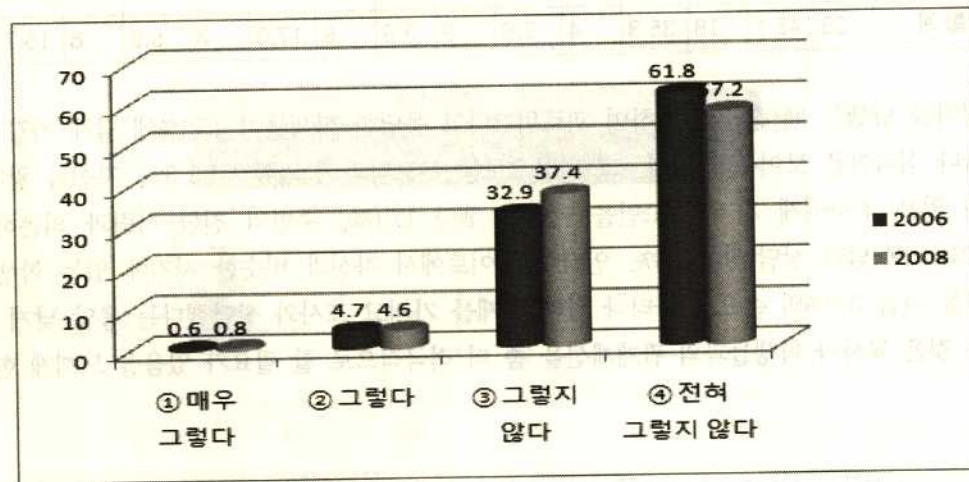


나. 학생인권 의식 관련

문26) 나는 '유엔 아동, 청소년권리협약'의 내용에 대해 알고 있다.

변인	문항	2-1. 나는 '유엔 아동, 청소년권리협약'의 내용에 대해 알고 있다.								빈도 합계
		①매우 그렇다		②그렇다		③그렇지 않다		④전혀 그렇지 않다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성별	여	3	.7%	15	3.6%	174	41.4%	228	54.3%	420
	남	5	.9%	29	5.4%	185	34.2%	322	59.5%	541
급별	중학교	6	1.4%	29	6.9%	153	36.3%	234	55.5%	422
	전문계고			5	4.3%	42	35.9%	70	59.8%	117
	인문계고	2	.5%	10	2.4%	164	38.9%	246	58.3%	422
지역	읍면	4	1.4%	15	5.3%	106	37.2%	160	56.1%	285
	도시	4	.6%	29	4.3%	253	37.4%	390	57.7%	676
합계		8	0.8	44	4.6	359	37.4	550	57.2	961

[2006년 2008년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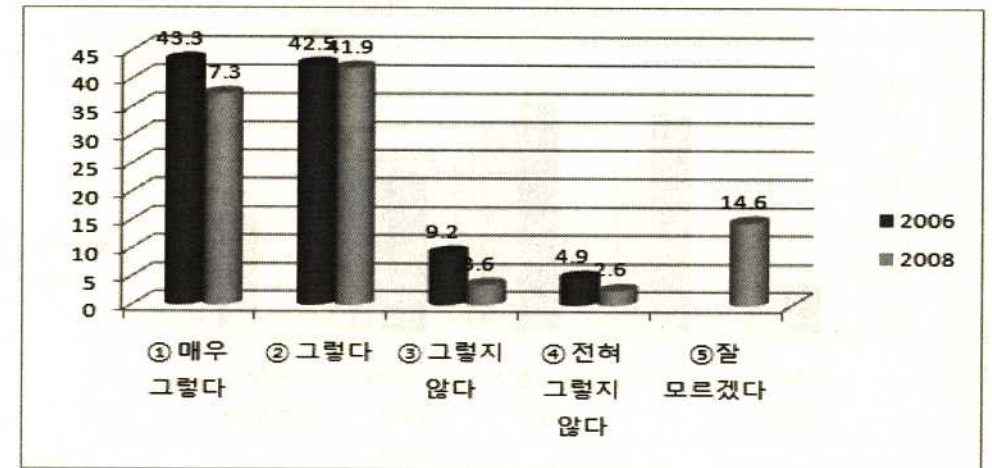


세계적으로 아동과 청소년 인권보장의 기본이 되는 "유엔 아동·청소년권리협약의 내용에 대해 알고 있느냐?" 는 질문에는 "그렇다" 가 5.4%로 낮은 응답을 보이고 있어 유엔 아동청소년권리협약에 대해서 대부분의 학생들이 모르고 있다. 이는 청소년의 인권과 권리에 대한 교육이 학교에서 잘 이루어 지어 지 않은 결과로 보인다.

문27) 청소년들은 자기에게 영향을 미치는 정책결정과정에 민주적 절차에 따라 참여할 권리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변인	문항	2-2. 청소년들은 자기에게 영향을 미치는 정책결정과정에 민주적 절차에 따라 참여할 권리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①매우 그렇다		②그렇다		③그렇지 않다		④전혀 그렇지 않다		⑤잘 모르겠다		빈도 합계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성별	여	150	35.8%	193	46.1%	8	1.9%	7	1.7%	61	14.6%	419
	남	208	38.4%	210	38.7%	27	5.0%	18	3.3%	79	14.6%	542
급별	중학교	138	32.8%	161	38.2%	22	5.2%	15	3.6%	85	20.2%	421
	전문계고	20	16.9%	61	51.7%	1	.8%	2	1.7%	34	28.8%	118
	인문계고	200	47.4%	181	42.9%	12	2.8%	8	1.9%	21	5.0%	422
지역	읍면	86	30.2%	122	42.8%	13	4.6%	13	4.6%	51	17.9%	285
	도시	272	40.2%	281	41.6%	22	3.3%	12	1.8%	89	13.2%	676
합계		358	37.3	403	41.9	35	3.6	25	2.6	140	14.6	961

[2006년 2008년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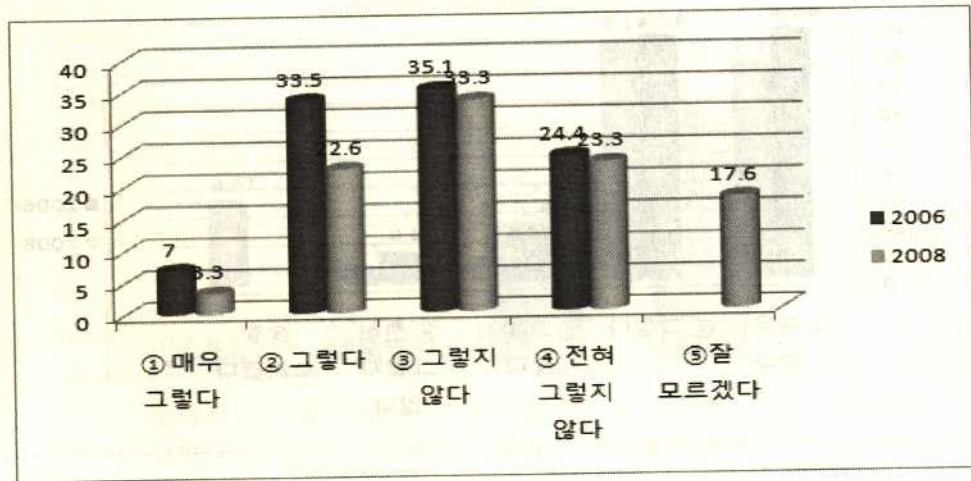
조사 대상 학생들의 79.2%가 자기에게 영향을 미치는 정책결정과정에 민주적 절차에 따라 참여할 권리를 가져야 한다고 응답하고 있어 높은 자기 결정권과 참여 정신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학생들의 참여 의식에 걸 맞는 민주적인 의사결정구조를 학교는 물론이고 사회적 차원에서 마련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어떤 인권이든 인권의 주체들이 참여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인권상황이 개선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더구나 현재 학칙의 제정, 학생징계, 학생의견의 표명, 학생자치활동 등은 학교 단위로 이루어지므로, 학교단위에서 학생들이 참여하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가 없다면 학생인권의 실현은 요원하다고 할 수 있다.

문28) 청소년들은 아직 완전한 자립능력과 권한을(권리를)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의 자유권에 제한이 가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변인		문항										빈도 합계	
		2-3. 청소년들은 아직 완전한 자립능력과 권한을(권리를)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의 자유권에 제한이 가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①매우 그렇다		②그렇다		③그렇지 않다		④전혀 그렇지 않다		⑤잘 모르겠다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성별	여	9	2.1%	86	20.5%	159	37.9%	81	19.3%	85	20.2%	420	
	남	23	4.2%	131	24.2%	161	29.7%	143	26.4%	84	15.5%	542	
급별	중학교	18	4.3%	103	24.4%	108	25.6%	89	21.1%	104	24.6%	422	
	전문계고	7	5.9%	33	28.0%	23	19.5%	20	16.9%	35	29.7%	118	
	인문계고	7	1.7%	81	19.2%	189	44.8%	115	27.3%	30	7.1%	422	
지역	읍면	11	3.9%	73	25.7%	72	25.4%	66	23.2%	62	21.8%	284	
	도시	21	3.1%	144	21.2%	248	36.6%	158	23.3%	107	15.8%	678	
합계		32	3.3	217	22.6	320	33.3	224	23.3	169	17.6	962	

[2006년 2008년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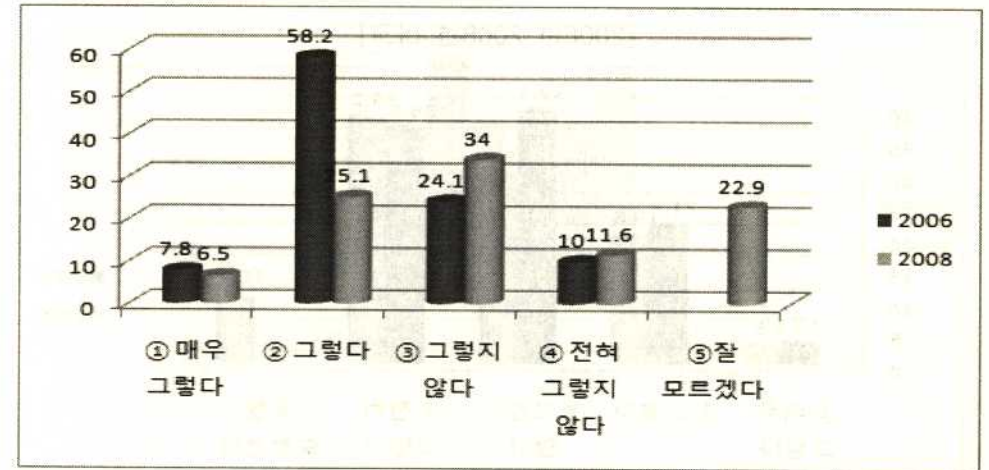


청소년들은 아직 완전한 자립능력과 권한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의 자유권에 제한이 가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학생들이 25.9%로 나타나 스스로 미숙한 인격체로 보는 경향이 있으나 과반수를 넘는 55.6%의 학생들은 자신들의 자유권에 제한이 가해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다. 자신들의 자유권에 제한이 가해지는 것에 가장 반대하는 비율을 보면 여학생보다는 남학생이, 전문계 고등학교 보다는 인문계 고등학교 학생들이 더 높게 나타났다.

문29) 학생이 잘못했을 때 교육적인 차원에서 체벌이 불가피하다고 생각한다.

변인		문항										빈도 합계	
		2-4. 학생이 잘못했을 때 교육적인 차원에서 체벌이 불가피하다고 생각한다.											
		①매우 그렇다		②그렇다		③그렇지 않다		④전혀 그렇지 않다		⑤잘 모르겠다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성별	여	20	4.8%	108	25.7%	155	36.9%	37	8.8%	100	23.8%	420	
	남	42	7.8%	133	24.6%	172	31.8%	74	13.7%	120	22.2%	541	
급별	중학교	25	5.9%	97	23.0%	127	30.2%	51	12.1%	121	28.7%	421	
	전문계고	7	5.9%	24	20.3%	29	24.6%	9	7.6%	49	41.5%	118	
	인문계고	30	7.1%	120	28.4%	171	40.5%	51	12.1%	50	11.8%	422	
지역	읍면	23	8.1%	75	26.4%	70	24.6%	32	11.3%	84	29.6%	284	
	도시	39	5.8%	166	24.5%	257	38.0%	79	11.7%	136	20.1%	677	
합계		62	6.5%	241	25.1	327	34.0	111	11.6	220	22.9	961	

[2006년 2008년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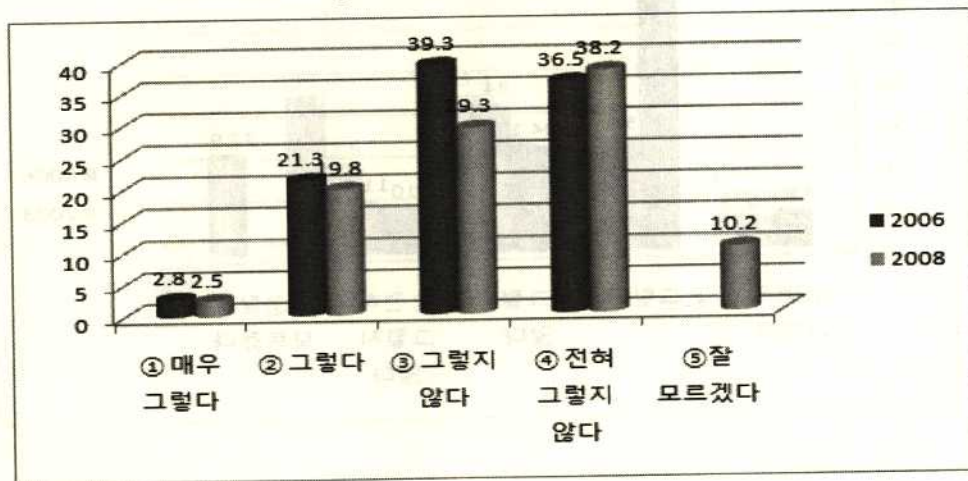


학생이 잘못했을 때 교육적인 차원에서 체벌의 필요성에 대해 31% 만이 스스로가 잘못했을 때는 교육적으로 체벌이 필요하다고 응답하고 있다. 2006년 조사 때의 65.9%보다는 많이 낮아져 교육적인 체벌의 필요성이 점점 더 줄어든다고 볼 수 있다.

문30) 학교에서 소지품, 두발 및 복장검사를 하는 것은 교육적으로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변인		문항										빈도 합계	
		2-5. 학교에서 소지품, 두발 및 복장검사를 하는 것은 교육적으로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①매우 그렇다		②그렇다		③그렇지 않다		④전혀 그렇지 않다		⑤잘 모르겠다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성별	여	7	1.7%	101	24.0%	139	33.1%	125	29.8%	48	11.4%	420	
	남	17	3.1%	90	16.6%	143	26.3%	243	44.8%	50	9.2%	543	
급별	중학교	11	2.6%	96	22.7%	106	25.1%	160	37.8%	50	11.8%	423	
	전문계고	5	4.2%	15	12.7%	33	28.0%	42	35.6%	23	19.5%	118	
	인문계고	8	1.9%	80	19.0%	143	33.9%	166	39.3%	25	5.9%	422	
지역	읍면	10	3.5%	55	19.3%	73	25.6%	112	39.3%	35	12.3%	285	
	도시	14	2.1%	136	20.1%	209	30.8%	256	37.8%	63	9.3%	678	
합계		24	2.5	191	19.8	282	29.3	368	38.2	98	10.2	963	

[2006년 2008년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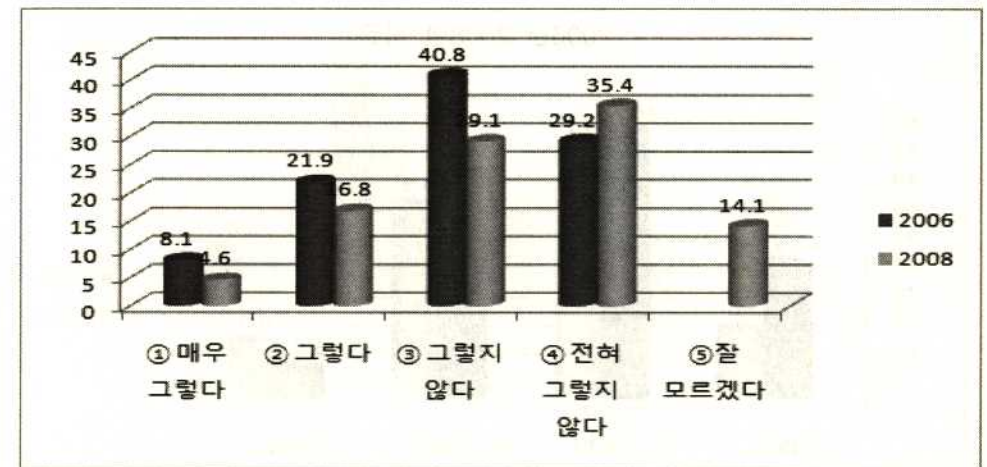


학교에서 소지품, 두발, 복장검사를 하는 것에 대해 67.3%가 부정적인 응답을 보여 개인의 프라이버시와 인격권, 표현의 자유에 대해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소지품, 두발, 복장검사에 대해 수용적인 학생은 전체 22.3%이며, 남학생보다 여학생이 많게 나타났다.

문31) 어떤 아이들은 왕따를 당해도 마땅하다.

변인		문항										빈도 합계	
		2-6. 어떤 아이들은 왕따를 당해도 마땅하다.											
		①매우 그렇다		②그렇다		③그렇지 않다		④전혀 그렇지 않다		⑤잘 모르겠다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성별	여	11	2.6%	81	19.5%	127	30.5%	131	31.5%	66	15.9%	416	
	남	33	6.1%	80	14.8%	152	28.0%	208	38.4%	69	12.7%	542	
급별	중학교	26	6.2%	75	17.8%	113	26.8%	140	33.2%	68	16.1%	422	
	전문계고	6	5.1%	16	13.7%	31	26.5%	42	35.9%	22	18.8%	117	
	인문계고	12	2.9%	70	16.7%	135	32.2%	157	37.5%	45	10.7%	419	
지역	읍면	13	4.6%	38	13.5%	75	26.7%	109	38.8%	46	16.4%	281	
	도시	31	4.6%	123	18.2%	204	30.1%	230	34.0%	89	13.1%	677	
합계		44	4.6	161	16.8	279	29.1	339	35.4	135	14.1	958	

[2006년 2008년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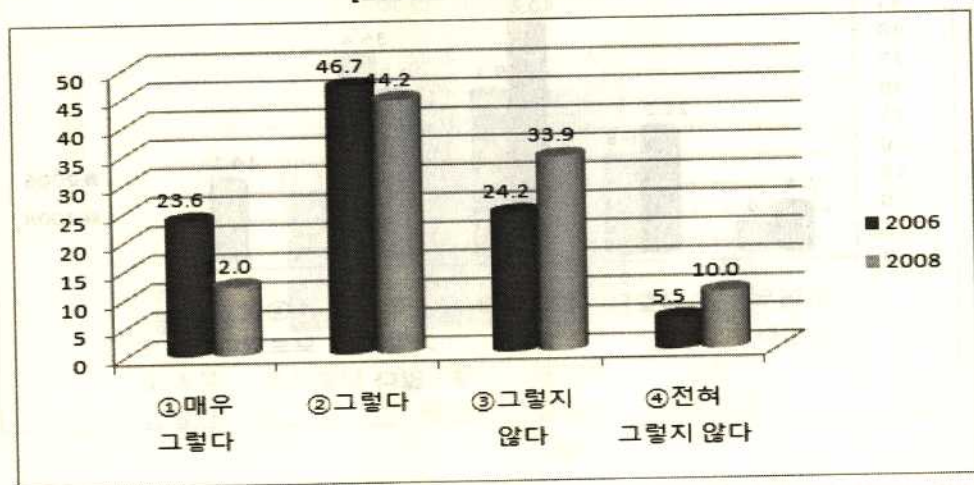


“어떤 아이들은 왕따 당해 마땅하다.”란 설문에는 부정적인 대답이 64.5%로 월등히 많다. 그러나 왕따 당해 마땅하다는 의견도 전체적으로 21.4%나 나왔다. 왕따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은 남학생 20.9%, 여학생 22.1%로 여학생 조금 더 높게 나타났으며, 급별로는 중학생이 24.0%로 가장 높게 나타나 중학생들에 대한 교육이 필요함을 보여 준다. 지역별로는 도시지역이 22.8%로 읍면지역의 18.1%보다 높게 나타났다.

문32) 나는 내 권리가 침해당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분명하게 시정을 요구한다.

변인		문항 2-7. 나는 내 권리가 침해당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분명하게 시정을 요구한다.								
		①매우 그렇다		②그렇다		③그렇지 않다		④전혀 그렇지 않다		빈도 합계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성별	여	32	7.7%	183	43.8%	166	39.7%	37	8.9%	418
	남	83	15.3%	241	44.5%	159	29.3%	59	10.9%	542
급별	중학교	51	12.1%	194	46.2%	127	30.2%	48	11.4%	420
	전문계고	16	13.6%	44	37.3%	45	38.1%	13	11.0%	118
	인문계고	48	11.4%	186	44.1%	153	36.3%	35	8.3%	422
지역	읍면	46	16.1%	121	42.5%	86	30.2%	32	11.2%	285
	도시	69	10.2%	303	44.9%	239	35.4%	64	9.5%	675
합계		115	12.0	424	44.2	325	33.9	96	10.0	960

[2006년 2008년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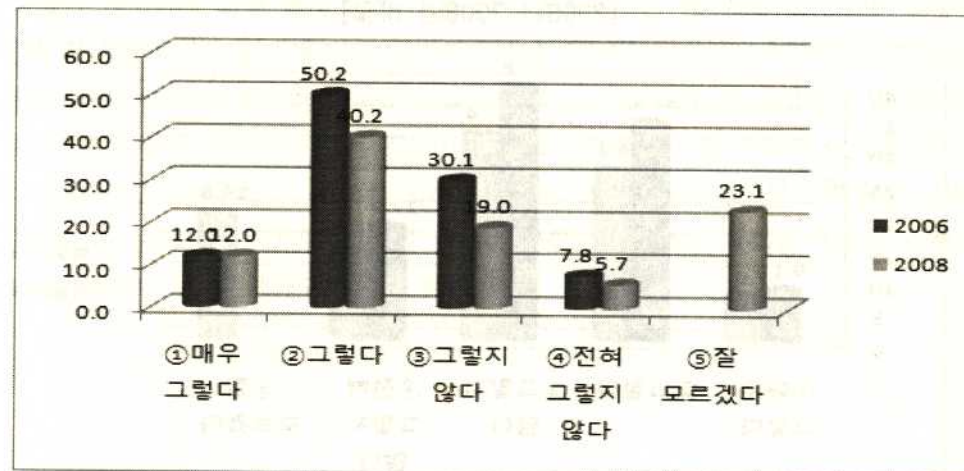


자신의 권리가 침해당할 때 56.2%의 학생들이 분명하게 시정을 요구하겠다고 응답해 자신의 권리를 지키는 데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특히 중학교 학생들이 고등학생들보다 조금 더 높게 나타났으며 여학생 보다는 남학생이 좀 더 적극적으로 자기 권리를 지키고자 하는 의식이 강하게 나타난다.

문33)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자기 권리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

변인		문항 2-8.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자기 권리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										
		①매우 그렇다		②그렇다		③그렇지 않다		④전혀 그렇지 않다		⑤잘 모르겠다		빈도 합계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성별	여	33	7.9%	177	42.2%	88	21.0%	20	4.8%	101	24.1%	419
	남	82	15.1%	210	38.7%	95	17.5%	35	6.4%	121	22.3%	543
급별	중학교	45	10.6%	135	31.9%	86	20.3%	31	7.3%	126	29.8%	423
	전문계고	12	10.2%	48	40.7%	13	11.0%	6	5.1%	39	33.1%	118
	인문계고	58	13.8%	204	48.5%	84	20.0%	18	4.3%	57	13.5%	421
지역	읍면	29	10.2%	104	36.5%	42	14.7%	29	10.2%	81	28.4%	285
	도시	86	12.7%	283	41.8%	141	20.8%	26	3.8%	141	20.8%	677
합계		115	12.0	387	40.2	183	19.0	55	5.7	222	23.1	962

[2006년 2008년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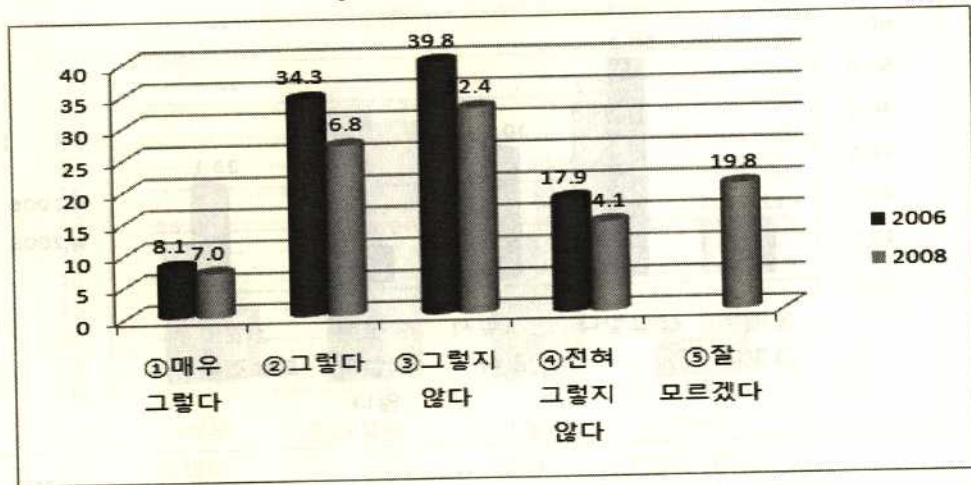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자기 권리에 대해 52.2%가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특히 인문계 고등학교 학생들이 62.3%로 그러한 경향이 상대적으로 강하다.

문34) 청소년들에게 의사결정권과 참여권을 주어도

청소년들이 그것을 어떻게 사용할지를 모를 것이라고 생각한다.

변인		문항										빈도 합계	
		2-9. 청소년들에게 의사결정권과 참여권을 주어도 청소년들이 그것을 어떻게 사용할지를 모를 것이라고 생각한다.											
		①매우 그렇다		②그렇다		③그렇지 않다		④전혀 그렇지 않다		⑤잘 모르겠다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성별	여	13	3.1%	115	27.6%	141	33.8%	64	15.3%	84	20.1%	417	
	남	54	9.9%	142	26.2%	170	31.3%	71	13.1%	106	19.5%	543	
급별	중학교	33	7.9%	95	22.6%	141	33.6%	53	12.6%	98	23.3%	420	
	전문계고	4	3.4%	32	27.1%	20	16.9%	12	10.2%	50	42.4%	118	
	인문계고	30	7.1%	130	30.8%	150	35.5%	70	16.6%	42	10.0%	422	
지역	읍면	25	8.8%	57	20.1%	82	28.9%	39	13.7%	81	28.5%	284	
	도시	42	6.2%	200	29.6%	229	33.9%	96	14.2%	109	16.1%	676	
합계		67	7.0	257	26.8	311	32.4	135	14.1	190	19.8	960	

[2006년 2008년 비교]



청소년들에게 의사결정권과 참여권을 주어도 청소년들은 그것을 어떻게 사용할지를 모를 것이라고 생각하느냐란 질문에 33.8%가 '그렇다' 라고 응답을 해 다소 자기 불신을 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또 이러한 경향은 위의 질문[자기 권리 인식에 대한 결과와 같은 양상을 보이고 있다. 성적중심의 학교생활은 자기 권리에 대한 인식을 약화시킬 뿐 아니라 주어진 권리를 행사하는 것에도 적극적이지 못한 결과를 가져오고 있다.

문35) 대중매체는 청소년에 대해 부정적이고 비하하는 내용을 많이 보도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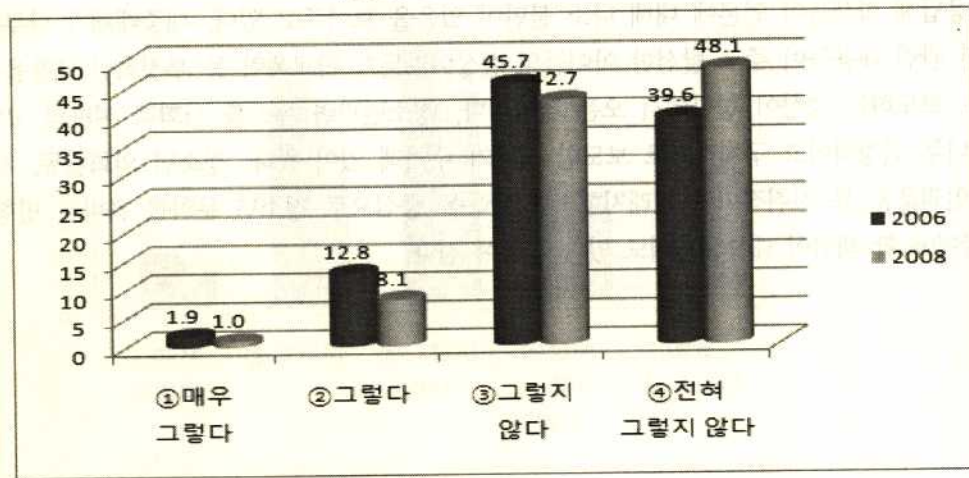
변인		문항										빈도 합계	
		2-10. 대중매체는 청소년에 대해 부정적이고 비하하는 내용을 많이 보도하고 있다.											
		①매우 그렇다		②그렇다		③그렇지 않다		④전혀 그렇지 않다		⑤잘 모르겠다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성별	여	20	4.8%	138	32.9%	112	26.7%	30	7.1%	120	28.6%	420	
	남	45	8.3%	176	32.5%	130	24.0%	47	8.7%	143	26.4%	541	
급별	중학교	25	5.9%	119	28.1%	95	22.5%	47	11.1%	137	32.4%	423	
	전문계고	9	7.6%	36	30.5%	20	16.9%	4	3.4%	49	41.5%	118	
	인문계고	31	7.4%	159	37.9%	127	30.2%	26	6.2%	77	18.3%	420	
지역	읍면	19	6.7%	84	29.6%	60	21.1%	30	10.6%	91	32.0%	284	
	도시	46	6.8%	230	34.0%	182	26.9%	47	6.9%	172	25.4%	677	
합계		65	6.8	314	32.7	242	25.2	77	8.0	263	27.4	961	

대중매체가 청소년에 대해 좋지 않은 면을 많이 보도한다는 데 대해 39.5%가 '그렇다' 고 응답해 학생들이 언론에 대해 다소 불만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대중매체가 다루는 청소년 관련 내용들이 주로 탈선한 아이들의 실상이라든지 학교폭력 등 부정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보도하는 경향이 강하에서 오는 결과이다. 청소년관련 뉴스를 사회적 여파의 고민 없이 너무 선정적이고 구체적으로 보도한 사례가 수차례 있어 왔다. 청소년 의회활동, 자발적인 인권운동 등 진취적이고 미래지향적인 활동을 중심으로 청소년 문화를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야 할 책임이 대중매체에도 있다고 보여 진다.

문36) 나는 청소년들이 자발적으로 하고 있는 '청소년인권운동'에 대해 알고 있다.

변인		문항 2-11. 나는 청소년들이 자발적으로 하고 있는 '청소년인권운동'에 대해 알고 있다.								
		①매우 그렇다		②그렇다		③그렇지 않다		④전혀 그렇지 않다		빈도 합계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성별	여			31	7.4%	203	48.3%	186	44.3%	420
	남	10	1.9%	47	8.7%	207	38.3%	276	51.1%	540
급별	중학교	6	1.4%	35	8.3%	159	37.8%	221	52.5%	421
	전문계고			7	5.9%	53	44.9%	58	49.2%	118
	인문계고	4	1.0%	36	8.6%	198	47.0%	183	43.5%	421
지역	읍면	3	1.1%	30	10.6%	109	38.4%	142	50.0%	284
	도시	7	1.0%	48	7.1%	301	44.5%	320	47.3%	676
합계		10	1.0	78	8.1	410	42.7	462	48.1	960

[2006년 2008년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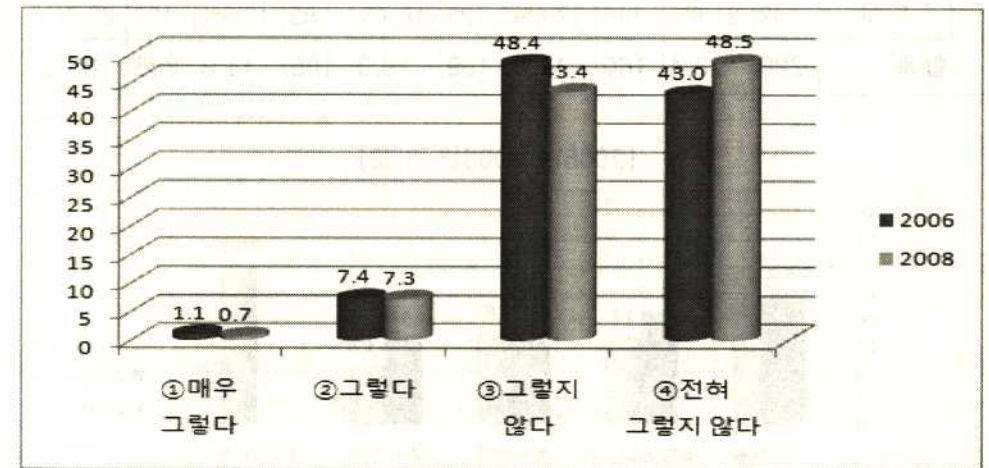


청소년 인권운동(두발 자유, 종교 자유 등)이 일부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짐에도 90.8%나 되는 대부분의 학생들이 청소년 인권운동에 대해 이를 모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학생들이 중심이 된 인권운동이 미약하게나마 의미 있게 펼쳐지고 있으며 시민운동 성격의 인권활동도 점차 그 영역을 넓혀가고 있다. 인터넷 동아리나 카페를 시작으로 이야기되던 것이 이제 공개적인 실천 활동과 법개정 운동에까지 확대되고 있으며, 청소년들의 자발적인 인권운동은 학교 밖이 아니라 학교 안에서 펼쳐지고 발전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문37) 나는 청소년의 정책참여를 위한 청소년자치기구인 '청소년위원회'나 '청소년의회' 활동에 대해 알고 있다.

변인		문항 2-12. 나는 청소년의 정책참여를 위한 청소년자치기구인 '청소년위원회'나 '청소년의회' 활동에 대해 알고 있다.								
		①매우 그렇다		②그렇다		③그렇지 않다		④전혀 그렇지 않다		빈도 합계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성별	여	1	.2%	23	5.5%	199	47.5%	196	46.8%	419
	남	6	1.1%	47	8.7%	218	40.3%	270	49.9%	541
급별	중학교	4	.9%	39	9.2%	169	40.0%	211	49.9%	423
	전문계고	1	.8%	7	5.9%	49	41.5%	61	51.7%	118
	인문계고	2	.5%	24	5.7%	199	47.5%	194	46.3%	419
지역	읍면	5	1.8%	31	11.0%	107	37.8%	140	49.5%	283
	도시	2	.3%	39	5.8%	310	45.8%	326	48.2%	677
합계		7	0.7	70	7.3	417	43.4	466	48.5	960

[2006년 2008년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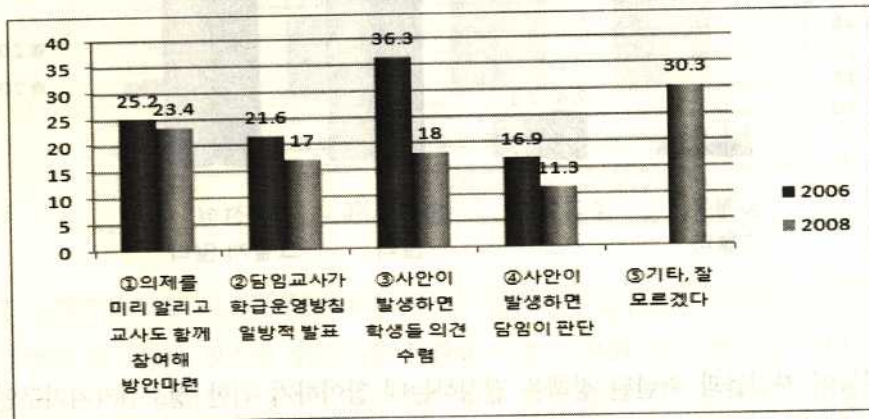
청소년들이 자신들과 관련된 정책을 결정하는데 참여하기 위한 청소년자치기구인 '청소년위원회'나 '청소년의회' 활동에 대해 91.9%가 전혀 모른다고 응답하고 있어 청소년 인권운동과 마찬가지로 대중매체가 청소년들의 바람직한 활동들에 대해 제대로 알리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청소년들의 참여 의식과 주인 의식을 고양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자발적인 활동들이 언론이나 학교 등을 통해 널리 알려져 많은 학생들이 동참하고 관심을 갖도록 해야 할 것이다.

다. 학생자치활동 관련

문38) 새 학년(학기) 학급이 구성되었을 때 학급회의를 통해 학급운영방안을 마련하는가?

문항		3-1. 새 학년(학기) 학급이 구성되었을 때 학급회의를 통해 학급운영방안을 마련하는가?										
		① 학생들에게 학급회의 의제를 미리 알리고 교사도 함께 참여해		② 학급 구성 초기에 담임교사가 운영방향을 일방적으로 발표		③ 학급운영 방침을 만들지 않았으나 사안이 발생하면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		④ 학급운영 방침을 예고하지 않고 그때마다 사안이 발생하면 담임이 판단		⑤ 잘 모르겠다		빈도 합계
변인	성별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성별	여	122	29.6%	60	14.6%	90	21.8%	32	7.8%	108
남	98		18.6%	100	18.9%	79	15.0%	74	14.0%	177	33.5%	528
급별	중학교	103	24.7%	72	17.3%	55	13.2%	42	10.1%	145	34.8%	417
	전문계고	32	28.3%	12	10.6%	10	8.8%	7	6.2%	52	46.0%	113
	인문계고	85	20.7%	76	18.5%	104	25.4%	57	13.9%	88	21.5%	410
지역	읍면	78	27.7%	44	15.6%	46	16.3%	21	7.4%	93	33.0%	282
	도시	142	21.6%	116	17.6%	123	18.7%	85	12.9%	192	29.2%	658
합계		220	23.4	160	17.0	169	18.0	106	11.3	285	30.3	940

[2006년 2008년 비교]



학급운영에 있어서 담임교사가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민주적으로 하는 비율(학생들에게 학급회의 의제를 미리 알리고 교사도 참여)이 23.4%인 반면 담임교사가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는 경우는 46.3%로 여전히 학급운영의 주도권이 교사에게 있음을 보여준다. 학급회의

를 통해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규칙들이 거의 모두 학생들의 일상생활과 관련이 있는 것들이고 보면 이러한 결정과정이 철저히 학생들의 토론과 합의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 마땅할 것이다. 가장 기본적인 의사결정 과정에서조차 학생들이 소외되고 있는 현실은 학생들의 인권신장과 관련하여 많은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문39) 주 1회 주어진 학급활동 시간이 잘 지켜지고 목적에 맞게 활동하고 있는가?

문항		3-2. 주 1회 주어진 학급활동 시간이 잘 지켜지고 목적에 맞게 활동하고 있는가?										
		① 잘 지켜지고 목적에 맞게 활동하고 있다		② 잘 지켜지지만 목적에 맞게 활동하는 것은 특별한 사안이 생겼을 때만		③ 시간은 주어지나 활동은 거의 하지 않는다		④ 그 시간을 전용하여 특정 학년의 경우 수업을 함		⑤ 그 시간을 학교행사로 활용		빈도 합계
변인	성별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성별	여	78	19.8%	80	20.4%	160	40.7%	39	9.9%	36
남	122		23.9%	91	17.8%	176	34.4%	55	10.8%	67	13.1%	511
급별	중학교	135	33.8%	59	14.8%	128	32.0%	48	12.0%	30	7.5%	400
	전문계고	28	25.0%	27	24.1%	36	32.1%	7	6.3%	14	12.5%	112
	인문계고	37	9.4%	85	21.7%	172	43.9%	39	9.9%	59	15.1%	392
지역	읍면	77	27.8%	56	20.2%	86	31.0%	33	11.9%	25	9.0%	277
	도시	123	19.6%	115	18.3%	250	39.9%	61	9.7%	78	12.4%	627
합계		200	22.1	171	18.9	336	37.2	94	10.4	103	11.4	904

학급활동(자치, 적응, 행사활동) 시간이 잘 지켜지고 있고 목적에 맞게 활동하고 있는가 라는 문항에 '시간은 주어지나 활동은 거의 하지 않는다.' 37.2%, '잘 지켜지고 목적에 맞게 활동한다.' 22.1%, '잘 지켜지지만 목적에 맞게 활동하는 것은 특별한 사안이 생겼을 때만 활동한다.' 18.9%, '그 시간을 학교행사(대청소 / 생활검열 / 적성심리검사 등)로 활용한다.' 11.4%, '그 시간을 전용하여 특정 학년의 경우 수업(보충수업 / 특기적성교육)을 한다.' 10.4%의 순으로 나타나 잘 지켜지고 있지 않으며 그 시간을 다른 활동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문40) 학급회의 순서 및 진행 요령을 학생(학급반장)이 알고 의제 결정을 민주적 절차에 따라 하고 있는가?

변인	문항	3-3. 학급회의 순서 및 진행 요령을 학생(학급반장)이 알고 의제 결정을 민주적 절차에 따라 하고 있는가?										
		① 학생들이 잘 알고 있으며 민주적 절차에 따라 결정하고 있다		②담임이 회의 진행 요령을 가르치고 필요할 때 참여하여 알찬회의		③ 학생들이 잘 알고 있으나 민주적 절차에 따라 결정하고 있지 못함		④ 학생들이 잘 알고 있지 않으며 민주적 절차에 따라 결정하지 못함		⑤ 잘 모르겠다		빈도 합계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성별	여	73	18.8%	36	9.3%	33	8.5%	52	13.4%	195	50.1%	389
	남	63	12.6%	37	7.4%	54	10.8%	97	19.4%	250	49.9%	
급별	중학교	67	17.0%	38	9.6%	40	10.2%	48	12.2%	201	51.0%	394
	전문계고	16	14.0%	9	7.9%	6	5.3%	10	8.8%	73	64.0%	
	인문계고	53	13.9%	26	6.8%	41	10.7%	91	23.8%	171	44.8%	
지역	읍면	39	14.3%	31	11.4%	32	11.7%	39	14.3%	132	48.4%	273
	도시	97	15.7%	42	6.8%	55	8.9%	110	17.8%	313	50.7%	
합계		136	15.3	73	8.2	87	9.8	149	16.7	445	50.0	890

학급회의 순서 및 진행 요령을 학생(학급반장)이 알고 의제 결정을 민주적 절차에 따라 하고 있는가라는 문항에 대한 응답을 보면, '잘 모르겠다.' 50.0%, '학생들이 잘 알고 있지 않으며 민주적 절차에 따라 결정하고 있지 못하다.' 16.7%, '학생들이 잘 알고 있으며 민주적 절차에 따라 결정하고 있다.' 15.3%, '학생들이 잘 알고 있으나 민주적 절차에 따라 결정하고 있지 못하다.' 9.8%, '담임이 회의 진행 요령을 가르치고 필요할 때 참여하여 알찬회의가 되고 있다.' 8.2%의 순으로 나타나 바람직한 모습인 회의 진행순서와 진행 요령을 알고 민주적으로 의제 결정하는 경우가 1/4 수준인 23.5%로 아주 낮으며 잘못 진행되고 있는 경우가 76.5%로 나타나 이에 대한 적극적인 지도가 필요하다.

문41) 학급회의가 민주적 절차에 따라 결정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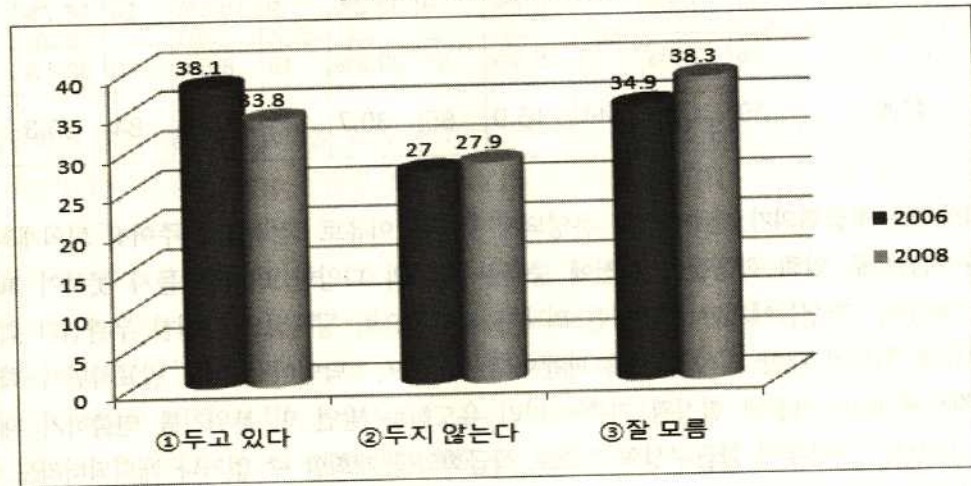
변인	문항	3-4. 학급회의가 민주적 절차에 따라 결정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① 처음부터 학급구성원 스스로 학급회의를 개최할 수 없거나 안전을 사전에 담임에게 허락 말아야 함		②담임이 의제를 발표하면서-학교장의 지시에 따라 사전에 결정된 기준 제시 및 유도		③갑작스레 주어진 회의 개최, 제한된 시간으로 인해 학생들이 사전에 준비 부족 및 의견 청취 불가능		④담임의 지나친 참여(의사진행발언, 의사결정발언)로 인해 민주적 의견수렴절차 무시		⑤ 학생들에게는 무관심한 의제가 일방적으로 정해짐으로 인한 무관심 회의에 대한 지식 부족		빈도 합계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성별	여	14	13.9%	15	14.9%	33	32.7%	7	6.9%	32	31.7%	101
	남	25	14.2%	29	16.5%	52	29.5%	18	10.2%	52	29.5%	
급별	중학교	20	16.9%	24	20.3%	27	22.9%	10	8.5%	37	31.4%	118
	전문계고	4	14.8%	5	18.5%	5	18.5%	2	7.4%	11	40.7%	
	인문계고	15	11.4%	15	11.4%	53	40.2%	13	9.8%	36	27.3%	
지역	읍면	13	14.4%	15	16.7%	29	32.2%	9	10.0%	24	26.7%	90
	도시	26	13.9%	29	15.5%	56	29.9%	16	8.6%	60	32.1%	
합계		39	14.1	44	15.9	85	30.7	25	9.0	84	30.3	277

학생들은 학급회의가 민주적으로 운영되지 못하는 이유로 '갑작스레 주어진 회의개최, 제한된 시간으로 인해 학생들이 사전에 충분한 생각과 다양한 의견을 듣지 못하기 때문이다.' 30.7%, '학생들에게는 무관심한 의제가 일방적으로 정해짐으로 인한 무관심과 학급구성원들의 회의에 대한 지식의 부족 때문이다.' 30.3%, '담임이 의제를 발표하면서-학교장의 지시에 따라 사전에 결정된 기준- 미리 유도하는 발언 및 분위기를 연출하기 때문이다.' 15.9%, '처음부터 학급구성원 스스로 학급회의를 개최할 수 없거나 개최되더라도 안전을 사전에 담임 허락 말아야 하기 때문이다.' 14.1%, '담임의 지나친 참여(의사진행발언, 의사결정발언)로 인해 민주적 의견수렴절차가 무시되기 때문이다.' 9.0%의 순으로 나타났다.

문42) 전교학생회장·부회장 피선거권자의 출마자격 제한
(학년 제한, 징계 중인 자 제외)을 두고 있는가?

변인		문항		3-5. 전교학생회장·부회장 피선거권자의 출마자격 제한(학년 제한, 징계 중인 자 제외)을 두고 있는가?				빈도 합계
		①두고 있다		②두지 않는다		③잘 모름		
		빈도	%	빈도	%	빈도	%	
성별	여	142	33.9%	120	28.6%	157	37.5%	419
	남	182	33.8%	147	27.3%	210	39.0%	539
급별	중학교	122	29.0%	127	30.2%	172	40.9%	421
	전문계고	40	33.9%	23	19.5%	55	46.6%	118
	인문계고	162	38.7%	117	27.9%	140	33.4%	419
지역	읍면	107	37.7%	82	28.9%	95	33.5%	284
	도시	217	32.2%	185	27.4%	272	40.4%	674
합계		324	33.8	267	27.9	367	38.3	958

[2006년 2008년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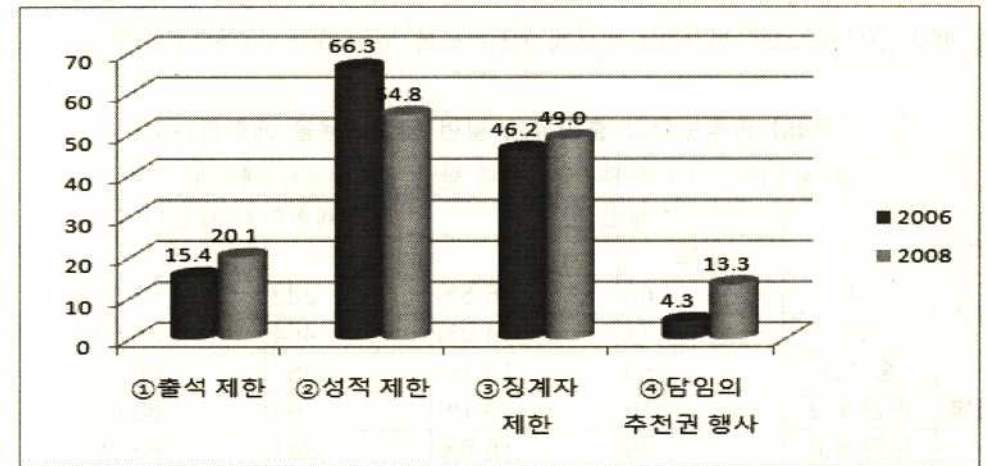


전교학생회장과 부회장 후보자의 자격에 제한을 두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33.8%로 나타나 학생들의 피선거권이 많이 침해당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입후보 자격제한 내용으로 성적 제한의 비율(54.8%)이 가장 높은 것은 불필요하고도 과도한 제한으로 학교가 학생을 진정한 교육주체로 인식하지 못하는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 그리고 자격 제한에 38.3%가 '잘 모름' 이라고 답한 것 역시 학생회가 명목만 유지되며 실제 학생들의 관심 밖의 활동으로 인식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문43) 피선거권자의 출마자격 제한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중복응답)

변인		문항								빈도 합계
		3-6 피선거권자의 출마자격 제한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중복응답)								
		①출석 제한(예: 사고결이 잦은 자 / 며칠 이상 인 자 등과 유사)		②성적 제한(예: 전 과목 상위 30% 이내, 전 과목 중 1 과목이라도 양이하가 없는 자)		③징계자 제한(예: 전 학년 봉사활동 이상의 징계를 받은 자, 1년내 봉사활동 이상의 징계자)		④담임의 추천권 행사(예: 담임의 추천을 받지 못한 자)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성별	여	27	22.3%	72	59.5%	67	55.4%	18	14.9%	121
	남	32	18.5%	89	51.4%	77	44.5%	21	12.1%	173
급별	중학교	18	18.4%	52	53.1%	33	33.7%	22	22.4%	98
	전문계고	11	23.9%	14	30.4%	29	63.0%	5	10.9%	46
	인문계고	30	20.0%	95	63.3%	82	54.7%	12	8.0%	150
지역	읍면	16	17.4%	51	55.4%	40	43.5%	16	17.4%	92
	도시	43	21.3%	110	54.5%	104	51.5%	23	11.4%	202
합계		59	20.1	161	54.8	144	49.0	39	13.3	294

[2006년 2008년 비교]



피선거권자의 출마자격 제한으로 성적(54.8%), 징계자(49.0%), 출석(20.1%), 담임의 추천권 행사(13.3%)의 순으로 응답하였다. 학생들의 자치조직인 학생회를 활성화하려면 학생회 구성에 있어서 법령의 근거가 없는 성적, 품행 등의 사유로 학생회 임원의 입후보를 제한하지 못하게 하는 등, 학생회 구성이 민주적이고 합리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학교규칙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문44) 선거관리규정에 따라 전교학생회 정·부회장 선거가 진행되고 있는가?

변인		문항 3-7. 선거관리규정에 따라 전교학생회 정·부회장 선거가 진행되고 있는가?										
		① 잘 지켜지고 있다		② 보통이다		③ 부분적으로만 지켜지고 있다		④ 거의 지켜지지 않고 있다		⑤ 잘 모르겠다		빈도 합계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성별	여	166	40.0%	109	26.3%	25	6.0%	12	2.9%	103	24.8%	415
	남	183	34.1%	159	29.6%	37	6.9%	22	4.1%	136	25.3%	537
급별	중학교	141	33.8%	105	25.2%	24	5.8%	18	4.3%	129	30.9%	417
	전문계고	33	28.0%	37	31.4%	7	5.9%	4	3.4%	37	31.4%	118
	인문계고	175	42.0%	126	30.2%	31	7.4%	12	2.9%	73	17.5%	417
지역	읍면	100	35.3%	86	30.4%	16	5.7%	15	5.3%	66	23.3%	283
	도시	249	37.2%	182	27.2%	46	6.9%	19	2.8%	173	25.9%	669
합계		349	36.7	268	28.2	62	6.5	34	3.6	239	25.1	952

선거관리 규정에 따라 전교학생회장과 부회장 선거가 공정하게 잘 지켜지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36.7%이고, '보통이다' 28.2%, 잘 모르겠다. 25.1%의 순으로 응답하여 공정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응답이 많았다. 그러나 아직도 10.1%의 학생들은 공정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다. 학생의 대표를 뽑는 학생회 선거를 통해 학생들은 민주주의 선거의 전형을 배워나가야 한다. 공정하고 투명하게 그리고 적극적으로 치른 학생회 선거는 성인으로 성장했을 때 민주시민으로서 선거권을 바르게 행사하도록 하는 가장 중요한 공부인 것이다.

문45) 입후보자의 출마유세 발언 원고내용을 제한하는가?

변인		문항 3-8. 입후보자의 출마유세 발언 원고내용을 제한하는가?				
		① 제한 한다		② 제한하지 않는다		빈도 합계
		빈도	%	빈도	%	
성별	여	66	16.5%	333	83.5%	399
	남	74	14.0%	454	86.0%	528
급별	중학교	53	13.1%	352	86.9%	405
	전문계고	18	16.1%	94	83.9%	112
	인문계고	69	16.8%	341	83.2%	410
지역	읍면	36	12.8%	246	87.2%	282
	도시	104	16.1%	541	83.9%	645
합계		140	15.1%	787	84.9%	927

입후보자의 출마유세 발언 원고 내용을 제한하는 경우가 15.1%, 제한하지 않는 경우가 84.9%로 나타나 많은 학교에서 원고 내용을 제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46) 입후보자의 출마유세 발언 원고내용을 어떤 방법으로 제한하는가?

변인		문항 3-9. 어떤 방법으로 제한하는가?								
		① 담임·학생부장이 사전검열 한다		② 유세 도중이라도 문제가 있으면 제한시킨다		③ 유세 발언 후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다고 판단되면 사후 검열 한다.		④ 잘 모르겠다		빈도 합계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성별	여	25	27.5%	6	6.6%	8	8.8%	52	57.1%	91
	남	14	14.0%	14	14.0%	9	9.0%	63	63.0%	100
급별	중학교	9	11.5%	11	14.1%	8	10.3%	50	64.1%	78
	전문계고	4	14.8%	4	14.8%	2	7.4%	17	63.0%	27
	인문계고	26	30.2%	5	5.8%	7	8.1%	48	55.8%	86
지역	읍면	12	24.5%	9	18.4%	3	6.1%	25	51.0%	49
	도시	27	19.0%	11	7.7%	14	9.9%	90	63.4%	142
합계		39	20.4	20	10.5	17	8.9	115	60.2	191

출마유세 발언 원고내용 제한 방법으로는 담임, 학생부장의 사전검열 20.4%, 유세 도중이라도 문제가 있으면 제한 10.5% 사후검열 8.9%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잘 모르겠다.' 라는 응답이 60.2%로 나타나 많은 학생들이 학생회장 선거에 관심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문47) 전교학생회가 구성된 후 학교에서

전교학생회의 활동·민주적 회의진행방법에 대한 교육을 하는가?

변인		문항 3-10. 전교학생회가 구성된 후 학교에서 전교학생회의 활동·민주적 회의진행방법에 대한 교육을 하는가?						
		① 인쇄물을 통한 구체적인 교육을 한다		② 학교장과 학생부장이 전교학생회장·부회장 당선 인사에서 간단히 설명한다.		③ 전교학생회 활동·민주적 회의진행방법에 대해 교육하지 않는다.		빈도 합계
		빈도	%	빈도	%	빈도	%	
성별	여	59	16.1%	151	41.1%	157	42.8%	367
	남	66	13.8%	187	39.1%	225	47.1%	478
급별	중학교	58	15.7%	163	44.2%	148	40.1%	369
	전문계고	21	20.6%	46	45.1%	35	34.3%	102
	인문계고	46	12.3%	129	34.5%	199	53.2%	374
지역	읍면	37	14.2%	121	46.4%	103	39.5%	261
	도시	88	15.1%	217	37.2%	279	47.8%	584
합계		125	14.8	338	40.0	382	45.2	845

전교학생회의 민주적인 활동 및 회의진행 방법을 교육하는 않는 경우가 45.2%로 높게 나타나 학생자치활동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가 필요함을 보여주고 있다.

문48) 최근 1년 동안 전교학생회를 몇 번 개최횟수는?

문항		3-11. 최근 1년 동안 전교학생회를 몇 번 개최횟수는?										
		①1회		②2-3회		③4-5회		④6회 이상		⑤잘 모르겠다		빈도 합계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성별	여	41	9.8%	24	5.7%	31	7.4%	33	7.9%	291	69.3%	420
	남	64	11.9%	50	9.3%	27	5.0%	34	6.3%	365	67.6%	540
급별	중학교	56	13.3%	33	7.8%	19	4.5%	18	4.3%	295	70.1%	421
	전문계고	15	12.7%	8	6.8%	6	5.1%	6	5.1%	83	70.3%	118
	인문계고	34	8.1%	33	7.8%	33	7.8%	43	10.2%	278	66.0%	421
지역	읍면	45	15.8%	22	7.7%	24	8.5%	21	7.4%	172	60.6%	284
	도시	60	8.9%	52	7.7%	34	5.0%	46	6.8%	484	71.6%	676
합계		105	10.9	74	7.7	58	6.0	67	7.0	656	68.3	960

최근 1년 동안 전교학생회를 개최한 횟수에 대한 문항에서 2/3가 넘는 68.8%의 학생들이 잘 모르겠다고 응답하여 전교학생회의 활성화와 다양한 참여 방법의 개발이 필요함을 보여주고 있다. 횟수로는 1회 10.9%, 2-3회 7.7%, 6회 이상 7.0%, 4-5회 6.0%의 순이었다.

문49) 학생회 대의원들이 학생회 개최를 요구하면 즉각 학교에서 응하는가?

문항		3-12. 대의원들이 학생회 개최를 요구하면 즉각 학교에서 응하는가?						
		①그렇다		②아니다		③잘 모르겠다		빈도 합계
		빈도	%	빈도	%	빈도	%	
성별	여	48	11.6%	61	14.7%	306	73.7%	415
	남	48	9.0%	90	16.8%	397	74.2%	535
급별	중학교	36	8.6%	65	15.4%	320	76.0%	421
	전문계고	15	13.0%	11	9.6%	89	77.4%	115
	인문계고	45	10.9%	75	18.1%	294	71.0%	414
지역	읍면	40	14.1%	44	15.5%	200	70.4%	284
	도시	56	8.4%	107	16.1%	503	75.5%	666
합계		96	10.1	151	15.9	703	74.0	950

학생회 대의원들이 한정되어 있고 또한 학생회 개최를 요구해 본 경험이 적기에 학생회 대의원들이 학생회 개최를 요구하면 즉각 학교에서 응하는가의 문항에서 잘 모르겠다는 응답이 3/4에 가까운 74.0%이었으며, 학교에서 응하는 경우는 10.1%, 응하지 않는 경우 15.9%로 응하지 않는 경우가 더 많았다.

문50) 전교학생회 개최 일시 및 의제는 언제 공고/통보(전교생 혹은 대의원에게)되는가?

문항		3-13. 전교학생회 개최 일시 및 의제는 언제 공고/통보(전교생 혹은 대의원에게)되는가?										
		①개최 날 혹은 당일		②개최 2-3일 전		③개최 1주일 전		④학급회의 통해 구성원 의견을 수렴한 후 개최		⑤잘 모르겠다		빈도 합계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성별	여	97	23.2%	19	4.5%	21	5.0%	10	2.4%	271	64.8%	418
	남	86	16.0%	32	6.0%	25	4.7%	12	2.2%	381	71.1%	536
급별	중학교	66	15.9%	21	5.1%	21	5.1%	8	1.9%	299	72.0%	415
	전문계고	15	12.7%	8	6.8%	13	11.0%	5	4.2%	77	65.3%	118
	인문계고	102	24.2%	22	5.2%	12	2.9%	9	2.1%	276	65.6%	421
지역	읍면	66	23.3%	21	7.4%	18	6.4%	11	3.9%	167	59.0%	283
	도시	117	17.4%	30	4.5%	28	4.2%	11	1.6%	485	72.3%	671
합계		183	19.2	51	5.3	46	4.8	22	2.3	652	68.3	954

전교학생회 의제 공고 및 통보는 회의 규칙에 따라 최소한 1주일 전에는 공고되어야 함에도 '잘 모르겠다.'를 제외하고 의견을 제시한 31.6% 중 7.1%만이 1주일 전에 공고하거나 학급회의를 통해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개최한다고 응답하여 형식적인 전교학생회 회의가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용가 넘는 학생들은 '잘 모르겠다.'라고 응답하여 전교학생에 대한 관심이 없으며, 무슨 활동을 하는지 모르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보인다.

문51) 전교학생회의 때 논의하는 안건(의제)은 대부분 어떤 것인가?

문항		3-14. 전교학생회의 때 논의하는 안건(의제)은 대부분 어떤 것인가?										
		①소풍 장소 정하기		②성금모금 액 정하기		③교칙개정 (학생생활규정)		④학생축제·체육대회 기획		⑤잘 모르겠다		빈도 합계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성별	여	34	8.2%	14	3.4%	77	18.6%	62	14.9%	228	54.9%	415
	남	43	8.1%	13	2.4%	87	16.3%	28	5.3%	362	67.9%	533
급별	중학교	30	7.2%	13	3.1%	80	19.1%	24	5.7%	271	64.8%	418
	전문계고	17	14.8%			14	12.2%	14	12.2%	70	60.9%	115
	인문계고	30	7.2%	14	3.4%	70	16.9%	52	12.5%	249	60.0%	415
지역	읍면	41	14.6%	7	2.5%	37	13.2%	29	10.3%	167	59.4%	281
	도시	36	5.4%	20	3.0%	127	19.0%	61	9.1%	423	63.4%	667
합계		77	8.1	27	2.8	164	17.3	90	9.5	590	62.2	948

전교학생회 때 논의하는 안건으로는 교칙개정 17.3%, 학생축제 체육대회 기획 9.5%, 소풍 장소 정하기 8.1%, 성금모금액 정하기 2.8%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전교학생회에서 어떤 안건을 다루는지 잘 모르겠다는 학생이 62.2%로 많은 학생들은 전교학생회의 안건 내용을 모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문52) 전교학생회의 시간은 대부분 얼마인가?

변인		문항 3-15. 전교학생회의 시간은 대부분 얼마인가?									
		①1시간 이내		②2시간 이내		③의제에 따라 시간 연장 가능		④잘 모르겠다		빈도 합계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성별	여	88	21.3%	43	10.4%	33	8.0%	249	60.3%	413	
	남	112	20.8%	43	8.0%	28	5.2%	355	66.0%	538	
급별	중학교	83	19.8%	16	3.8%	28	6.7%	292	69.7%	419	
	전문계고	22	19.0%	5	4.3%	11	9.5%	78	67.2%	116	
	인문계고	95	22.8%	65	15.6%	22	5.3%	234	56.3%	416	
지역	읍면	80	28.3%	19	6.7%	23	8.1%	161	56.9%	283	
	도시	120	18.0%	67	10.0%	38	5.7%	443	66.3%	668	
합계		200	21.0	86	9.0	61	6.4	604	63.5	951	

전교학생회 회의 시간은 1시간 이내 21.0%, 2시간 이내 9.0%, 의제에 따라 시간 연장 가능 6.4%의 순으로 응답하였다.

문53) 전교학생회 개최(시작과 마무리 제외) 중 안전설정 및 의사결정에 학교 선생님(학교장·학생부장·학생부 교사 등)이 참여하는가?

변인		문항 3-16. 전교학생회 개최(시작과 마무리 제외) 중 안전설정 및 의사결정에 학교 선생님(학교장·학생부장·학생부 교사 등)이 참여하는가?											
		①참관만 한다		②학생회장이 도움말을 요청할 때 발언권(참고 발언)을 부여		③발언권 부여와 관계없이 발언(의사진행발언)		④발언권 부여와 관계없이 의사결정 발언까지 한다		⑤잘 모르겠다		빈도 합계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성별	여	38	9.0%	38	9.0%	14	3.3%	6	1.4%	324	77.1%	420	
	남	41	7.7%	34	6.4%	11	2.1%	23	4.3%	426	79.6%	535	
급별	중학교	34	8.1%	36	8.6%	7	1.7%	14	3.3%	327	78.2%	418	
	전문계고	9	7.6%	11	9.3%	3	2.5%	3	2.5%	92	78.0%	118	

지역	인문계고		읍면		도시		합계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인문계고	36	8.6%	25	6.0%	15	3.6%	12	2.9%	331	79.0%
읍면	29	10.3%	30	10.7%	8	2.8%	9	3.2%	205	73.0%	281
도시	50	7.4%	42	6.2%	17	2.5%	20	3.0%	545	80.9%	674
합계	79	8.3	72	7.5	25	2.6	29	3.0	750	78.5	955

전교학생회 선생님 참여에 대해 '참관만 한다.' 8.3%, '학생회장이 도움말을 요청할 때 발언권(참고발언)을 부여한다.' 7.5%, '발언권 부여와 관계없이 의사결정 발언까지 한다.' 3.0%, '발언권 부여와 관계없이 발언(의사진행발언)한다.' 2.6%의 순으로 응답하여 선생님이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경우는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잘 모르겠다' 78.5%로 3/4이 넘는 학생들이 전교학생회에 참여해 본 경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54) 체육대회기획·학생축제기획·수학여행지 선정 등을 전교학생회 개최(위원회 구성 등)를 통해 의견수렴·기획·반영된 사례가 있는가?

변인		문항 3-17. 체육대회기획·학생축제기획·수학여행지 선정 등을 전교학생회 개최(위원회 구성 등)를 통해 의견수렴·기획·반영된 사례가 있는가?											
		①의견수렴·기획·반영되었다		②의견수렴 및 기획은 되었으나 대부분 반영되지 않았다		③의견수렴 정도에 그쳤다		④대부분 학교에서 제시된 계획에 따른 뿐이다		⑤잘 모르겠다		빈도 합계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성별	여	120	28.7%	24	5.7%	17	4.1%	55	13.2%	202	48.3%	418	
	남	83	15.4%	53	9.8%	34	6.3%	64	11.9%	305	56.6%	539	
급별	중학교	60	14.3%	36	8.6%	16	3.8%	56	13.4%	251	59.9%	419	
	전문계고	28	23.7%	6	5.1%	4	3.4%	12	10.2%	68	57.6%	118	
지역	읍면	68	24.0%	27	9.5%	16	5.7%	39	13.8%	133	47.0%	283	
	도시	135	20.0%	50	7.4%	35	5.2%	80	11.9%	374	55.5%	674	
합계		203	21.2	77	8.0	51	5.3	119	12.4	507	53.0	957	

체육대회기획·학생축제기획·수학여행지 선정 등을 전교학생회 개최(위원회 구성 등)를 통해 의견이 수렴되어 기획·반영된 경우는 21.3%로 나타나 많은 학교에서 학생자치기구인 전교학생회의 결정을 존중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학생 자치 기구를 활성화 하려면 학교에서도 학생들의 학교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내용들은 적극적으로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하여야 할 것이다.

문55) 학교규칙(학칙/교칙)·학생선도규정·학생회규정·동아리규정·학생체벌규정·학생생활수칙 등 학생의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규칙이나 규정을 개정할 때 전교학생회에서 이 내용을 토론토록 한 사례가 있는가?

변인		문항		3-18. 학교규칙(학칙/교칙)·학생선도규정·학생회규정·동아리규정·학생체벌규정·학생생활수칙 등 학생의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규칙이나 규정을 개정할 때 전교학생회에서 이 내용을 토론토록 한 사례가 있는가?				빈도 합계
		① 사례가 있다		② 사례가 없다		③ 잘 모르겠다		
		빈도	%	빈도	%	빈도	%	
성별	여	77	18.6%	44	10.6%	293	70.8%	414
	남	46	8.7%	76	14.4%	407	76.9%	529
급별	중학교	41	10.0%	51	12.4%	320	77.7%	412
	전문계고	11	9.6%	14	12.2%	90	78.3%	115
	인문계고	71	17.1%	55	13.2%	290	69.7%	416
지역	읍면	26	9.3%	43	15.4%	210	75.3%	279
	도시	97	14.6%	77	11.6%	490	73.8%	664
합계		123	13.0	120	12.7	700	74.2	943

학생의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규칙이나 규정을 개정할 때 전교학생회에서 토론토록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며 이러한 사례가 있었던 경우는 13.0% 아주 적은 수의 학교에서만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루의 대부분을 학교에서 보내는 학생들의 생활과 관련한 규정이나 규칙은 반드시 학생들의 요구를 수렴하여 제정되고 개정되어야 할 것이다.

문56) 학교 내에 공식적인(지도교사가 있고 학교에서 인정함) 동아리 수는 몇 개인가?

변인		문항		3-19. 학교 내에 공식적인(지도교사가 있고 학교에서 인정함) 동아리 수는 몇 개인가?									
		① 5개 이내		② 10개 이내		③ 20개 이내		④ 30개 이내		⑤ 30개 이상		빈도 합계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성별	여	150	37.0%	131	32.3%	82	20.2%	24	5.9%	18	4.4%	405	
	남	240	46.5%	157	30.4%	85	16.5%	24	4.7%	10	1.9%	516	
급별	중학교	231	59.1%	69	17.6%	64	16.4%	20	5.1%	7	1.8%	391	
	전문계고	40	35.4%	50	44.2%	12	10.6%	8	7.1%	3	2.7%	113	
	인문계고	119	28.5%	169	40.5%	91	21.8%	20	4.8%	18	4.3%	417	
지역	읍면	147	56.3%	75	28.7%	26	10.0%	10	3.8%	3	1.1%	261	
	도시	243	36.8%	213	32.3%	141	21.4%	38	5.8%	25	3.8%	660	
합계		390	42.3	288	31.3	167	18.1	48	5.2	28	3.0	921	

학교 내 동아리 수에 대한 응답에서 5개 이내라고 응답한 학생이 42.3%, 10개 이내 31.3%, 10개 이상이 26.3%로 나타났다. 과반수에 가까운 학교에서 동아리 활동이 아주 미미하며, 전체적으로 학교에서 동아리 활동이 저조하다고 볼 수 있어 다양한 동아리를 만들어 활동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지원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문57) 최근(약 2-3년간) 본교의 전체 동아리 활동은 잘 되고 있는가?

변인		문항		3-20. 최근(약 2-3년간) 본교의 전체 동아리 활동은 잘 되고 있는가?									
		① 더 잘 되고 있다		② 별 변화가 없다		③ 예전보다 못하다		④ 심각할 정도로 어렵다		⑤ 잘 모르겠다		빈도 합계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성별	여	34	8.4%	122	30.2%	42	10.4%	29	7.2%	177	43.8%	404	
	남	40	7.6%	119	22.6%	41	7.8%	52	9.9%	275	52.2%	527	
급별	중학교	29	7.2%	93	23.2%	31	7.7%	24	6.0%	224	55.9%	401	
	전문계고	13	11.4%	26	22.8%	3	2.6%	7	6.1%	65	57.0%	114	
	인문계고	32	7.7%	122	29.3%	49	11.8%	50	12.0%	163	39.2%	416	
지역	읍면	30	11.2%	55	20.6%	16	6.0%	33	12.4%	133	49.8%	267	
	도시	44	6.6%	186	28.0%	67	10.1%	48	7.2%	319	48.0%	664	
합계		74	7.9	241	25.9	83	8.9	81	8.7	452	48.5	931	

학교 내 동아리 활동의 활성화에는 7.9%가 잘되고 있다고 응답했으며, 17.6%가 활동이 전보다 잘 되지 못한다고 답해 동아리 활동 활성화에 더 많은 노력과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특히 48.5%의 학생들이 '잘 모르겠다.' 라고 응답하여 많은 학교에 동아리 활동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아이들의 개성과 취향을 살린 다양한 활동에 대한 배려가 아쉽다.

문58) 동아리 활동이 위축된 원인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중복응답)

변인		문항		3-21. 동아리 활동이 위축된 원인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중복응답)													
		① 입시교육(보충수업, 야간자습, 강화 등)의 강화로 인해 시간을 내기 어려움		② 입시교육에 편승한 학교분위기 조성		③ 부모님의 반대		④ 학원이나 과외를 받는데 지장을 주기 때문		⑤ 시간과 돈이 낭비되기 때문		⑥ 활동에 지친 규제(모든 활동에 반드시 신고, 지도교사 의무화)로 인해		⑦ 구성원들의 역량 부족으로 인		빈도 합계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성별	여	29	33.7	21	24.4	4	4.7	4	4.7	10	11.6	16	18.6	12	14.0	86	
	남	44	36.7	19	15.8	8	6.7	17	14.2	20	16.7	18	15.0	24	20.0	120	
급별	중학교	73	35.4	40	19.4	12	5.8	21	10.2	30	14.6	34	16.5	36	17.5	206	

	실업계고	19	25.7	8	10.8	5	6.8	16	21.6	11	14.9	12	16.2	14	18.9	74
	인문계고	3	18.8	2	12.5	1	6.3	3	18.8	6	37.5	1	6.3	1	6.3	16
지역	읍면	51	44.0	30	25.9	6	5.2	2	1.7	13	11.2	21	18.1	21	18.1	116
	도시	73	35.4	40	19.4	12	5.8	21	10.2	30	14.6	34	16.5	36	17.5	206
합계		27	43.5	10	16.1	5	8.1	8	12.9	7	11.3	8	12.9	14	22.6	62
		46	31.9	30	20.8	7	4.9	13	9.0	23	16.0	26	18.1	22	15.3	144
		73	35.4	40	19.4	12	5.8	21	10.2	30	14.6	34	16.5	36	17.5	206

동아리 활동이 위축된 원인으로 '입시교육의 강화로 인해 시간을 내기 힘들다'가 45.4%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입시교육에 편승한 학교(면학)분위기 조성"이 19.4%로 나타나 입시위주의 교육이 동아리 활동을 힘들게 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또한 구성원들의 역량 부족(17.5%), 활동에 대한 지나친 규제(16.5%), 시간과 돈이 낭비되기 때문(14.6%) 등도 동아리 활동을 위축시키는 중요한 이유가 되고 있다.

문59) 3-22. [1,2학년만 체크(√표시)]주 1회 주어진 특별활동 시간이 지켜지고 있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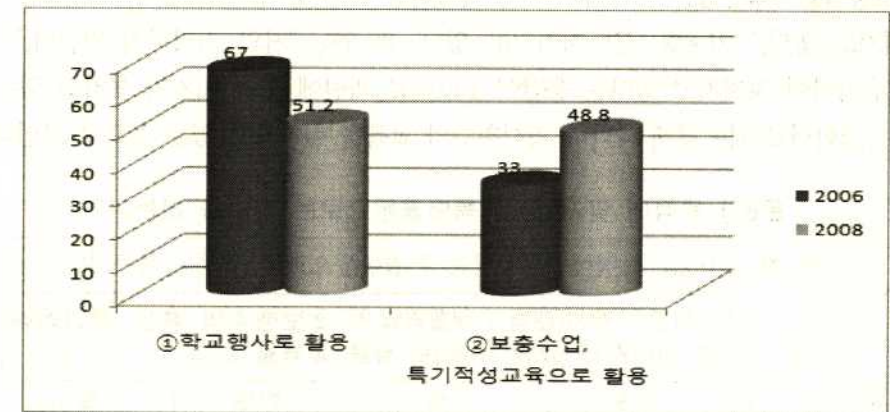
문 항		3-22. [1,2학년만]주 1회 주어진 특별활동 시간이 지켜지고 있는가?								빈도 합계	
		①잘 지켜지고 있다		②어느 정도 지켜지고 있다		③거의 지켜지지 않는다		④잘 모르겠다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변 인	성별	여	74	18.5%	158	39.5%	97	24.3%	71	17.8%	400
	남	84	16.7%	204	40.6%	123	24.5%	92	18.3%	503	
급 별	중학교	97	25.8%	152	40.4%	53	14.1%	74	19.7%	376	
	전문계고	31	26.7%	49	42.2%	10	8.6%	26	22.4%	116	
	인문계고	30	7.3%	161	39.2%	157	38.2%	63	15.3%	411	
지 역	읍면	47	18.2%	100	38.8%	53	20.5%	58	22.5%	258	
	도시	111	17.2%	262	40.6%	167	25.9%	105	16.3%	645	
합계		158	17.5	362	40.1	220	24.4	163	18.1	903	

중·고등학교 1, 2학년들은 주 1회 주어진 특별활동 시간이 '어느 정도 지켜지고 있다.' 40.1%, '거의 지켜지지 않는다.' 24.2%, '잘 모르겠다.' 18.1%, '잘 지켜지고 있다' 17.5%의 순으로 응답하여 지켜지고 있다는 응답이 57.5%로 과반을 조금 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60) 목적에 맞지 않는 특별활동으로는 무엇을 하는가?

문 항		3-23. 목적에 맞지 않는 특별활동으로는 무엇을 하는가?				빈도 합계
		①학교 행사(대청소·생활검열·적성, 심리검사·신체검사 등)로 활용		②보충수업·특기적성교육 등을 함		
		빈도	%	빈도	%	
성 별	여	115	54.5%	96	45.5%	211
	남	151	48.9%	158	51.1%	309
급 별	중학교	99	51.3%	94	48.7%	193
	전문계고	31	50.8%	30	49.2%	61
	인문계고	136	51.1%	130	48.9%	266
지 역	읍면	75	50.7%	73	49.3%	148
	도시	191	51.3%	181	48.7%	372
합계		266	51.2	254	48.8	520

[2006년 2008년 비교]



중·고등학교 1, 2학년들은 목적에 맞지 않는 특별활동으로 '학교행사로 활용한다.'가 51.2%, '보충수업, 특기적성교육 등을 한다.'가 48.8%로 나타났으며 2006년 조사 때 보다 특히 보충수업으로 활용하는 경우가 더 많이 증가되었다.

문61) [3학년 만 체크(√표시)]주 1회 주어진 특별활동 시간이 지켜지고 있는가?

변인		문항 3-24. [3학년 만] 주 1회 주어진 특별활동 시간이 지켜지고 있는가?								
		① 잘 지켜지고 있다		② 어느 정도 지켜지고 있다		③ 거의 지켜지지 않는다		④ 잘 모르겠다		빈도 합계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성별	여	7	17.1%	4	9.8%	4	9.8%	26	63.4%	41
	남	17	21.8%	22	28.2%	5	6.4%	34	43.6%	78
급별	중학교	19	26.8%	14	19.7%	5	7.0%	33	46.5%	71
	전문계고	4	23.5%	4	23.5%	1	5.9%	8	47.1%	17
	인문계고	1	3.2%	8	25.8%	3	9.7%	19	61.3%	31
지역	읍면	15	31.3%	11	22.9%	3	6.3%	19	39.6%	48
	도시	9	12.7%	15	21.1%	6	8.5%	41	57.7%	71
합계		24	20.2	26	21.8	9	7.6	60	50.4	119

중·고등학교 3학년들은 주 1회 주어진 특별활동 시간이 '잘 모르겠다.' 50.4%, '어느 정도 지켜지고 있다.' 21.8%, '잘 지켜지고 있다' 20.2%, '거의 지켜지지 않는다.' 7.6%의 순으로 응답하여 지켜지고 있다는 응답이 42.0%로 과반에 조금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1, 2학년보다는 낮게 나타나 입시위주의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문62) 목적에 맞지 않는 특별활동으로는 무엇을 하는가?

변인		문항 3-25. 목적에 맞지 않는 특별활동으로는 무엇을 하는가?				
		① 학교 행사(대청소·생활검열·적성, 심리검사·신체검사 등)로 활용		② 보충수업 혹은 특기적성 교육을 한다		빈도 합계
		빈도	%	빈도	%	
성별	여	6	31.6%	13	68.4%	19
	남	18	35.3%	33	64.7%	51
급별	중학교	13	31.7%	28	68.3%	41
	전문계고	3	33.3%	6	66.7%	9
	인문계고	8	40.0%	12	60.0%	20
지역	읍면	10	38.5%	16	61.5%	26
	도시	14	31.8%	30	68.2%	44
합계		24	34.3	46	65.7	70

중·고등학교 3학년들은 목적에 맞지 않는 특별활동으로 '보충수업 혹은 특기적성 교육을 한다.' 65.7%, '학교행사로 활용한다.' 가 34.3%로 나타나 2006년 조사 때의 '보충수업,

특기적성교육 등을 한다.' 48.8% 보다 보충수업 및 특기적성교육으로의 활용이 16.9% 높게 나타나 입시위주의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학급활동시간과 특별활동 시간은 학생들이 힘겨운 학습노동에서 벗어나 그나마 자유롭게 토론하고 자신들의 문제를 결정할 수 있는 시간들이다. 그러나 학교는 오직 공부만을 위한 곳이고 그 이외의 학급활동이나 특별활동, 동아리 활동은 서서히 침체되어 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이 학교교육의 현주소이며 세계 최장 학습노동을 하는 우리 아이들이 서 있는 정확한 위치이다.

문63) 학교급식과 관련하여, 전교학생대표(학생회 대표 또는 급식과 관련된 대표)가 직접 참여해 급식(위생·식단 짜기·영양)에 대한 학생들의 생각을 말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제도적 기구가 있는가?

변인		문항 3-26. 학교급식과 관련하여, 전교학생대표(학생회 대표 또는 급식과 관련된 대표)가 직접 참여해 급식(위생·식단 짜기·영양)에 대한 학생들의 생각을 말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제도적 기구가 있는가?								
		① 구성되어 있지 않다		② 구성은 되어 있으나 형식에 불과하다		③ 구성되어 정기적으로 열리고 있으나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건의하는 정도		④ 자유롭게 학생의견 개진할 수 있는 정기적 회의를 통해 문제점을 개선하며, 결과를 공개한다.		빈도 합계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성별	여	246	64.4%	65	17.0%	42	11.0%	29	7.6%	382
	남	303	61.1%	101	20.4%	57	11.5%	35	7.1%	496
급별	중학교	252	66.5%	62	16.4%	36	9.5%	29	7.7%	379
	전문계고	60	57.1%	20	19.0%	15	14.3%	10	9.5%	105
	인문계고	237	60.2%	84	21.3%	48	12.2%	25	6.3%	394
지역	읍면	177	66.3%	40	15.0%	34	12.7%	16	6.0%	267
	도시	372	60.9%	126	20.6%	65	10.6%	48	7.9%	611
합계		549	62.5	166	18.9	99	11.3	64	7.3	878

학교급식과 관련하여, 전교학생대표(학생회 대표 또는 급식과 관련된 대표)가 직접 참여해 급식(위생·식단 짜기·영양)에 대한 학생들의 생각을 말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제도적 기구가 있는가라는 문항에 '구성되어 있지 않다.' 62.5%, '구성은 되어 있으나 형식에 불과하다.' 18.9%, '구성되어 정기적으로 열리고 있으나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건의하는 정도' 11.3%, '자유롭게 학생의견 개진할 수 있는 정기적 회의를 통해 문제점을 개선하며, 회의 결과를 공개 한다.' 7.3%로 나타나 2/3에 가까운 학교에서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할 제도적 기구가 없는 것으로 보이며 가장 바람직한 경우인 학생들의 의견 수렴과 제도적 장치인 정기적인 회의 및 회의결과 공개가 이루어지는 경우는 7.3%로 아주 낮게 나타났다.

문64) 학교축제(혹은 학예제, 한마당 등)를 준비·시행함에 있어서 전교학생(학생회·동아리)대표를 구성(예: 학생축제준비위원회)하여 참여하고 있는가?

면 인	문 항	3-27. 학교축제(혹은 학예제, 한마당 등)를 준비·시행함에 있어서 전교학생(학생회·동아리)대표를 구성(예: 학생축제준비위원회)하여 참여하고 있는가?										
		① 구성되어 있으나 형식에 불과하다		② 대표성을 띠고 있으나, 행사에 대한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건의하는 정도다.		③ 대표성을 띠고 있으나, 담당부서 선생님과 함께 축제행사를 준비, 실행한다.		④ 대표성을 띠고 있으며, 담당부서 선생님과 함께 행사(기획, 준비, 실행)에 참여하며 행사후 평가를 기록으로 남긴다.		⑤ 잘 모르겠다.		빈도 합계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성별	여	58	14.0%	43	10.4%	61	14.7%	53	12.8%	199	48.1%	414
	남	99	18.6%	50	9.4%	52	9.8%	22	4.1%	309	58.1%	532
급별	중학교	74	17.7%	24	5.8%	37	8.9%	23	5.5%	259	62.1%	417
	전문계고	7	6.0%	6	5.2%	15	12.9%	17	14.7%	71	61.2%	116
	인문계고	76	18.4%	63	15.3%	61	14.8%	35	8.5%	178	43.1%	413
지역	읍면	60	21.3%	19	6.7%	40	14.2%	21	7.4%	142	50.4%	282
	도시	97	14.6%	74	11.1%	73	11.0%	54	8.1%	366	55.1%	664
합계		157	16.6	93	9.8	113	11.9	75	7.9	508	53.7	946

학교축제(혹은 학예제, 한마당 등)를 준비·시행함에 있어서 전교학생(학생회·동아리)대표를 구성(예: 학생축제준비위원회)하여 참여하고 있는가라는 문항에 '잘 모르겠다.' 53.7%, '구성되어 있으나 형식에 불과하다' 16.6%, '대표성을 띠고 있으나, 담당부서 선생님과 함께 축제행사를 준비, 실행한다.' 11.9%, '대표성을 띠고 있으나, 행사에 대한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건의하는 정도다.' 9.8%, '대표성을 띠고 있으며, 담당부서 선생님과 함께 행사(기획, 준비, 실행)에 참여하며, 행사 후 평가를 가지고 기록으로 남긴다.' 7.9%의 순으로 응답하였다. 학생들이 주체가 되어 진행되고 운영되어야 할 학교축제가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을 보여 주고 있으며, 많은 학생들은 학생들이 참여하여 기획하고 준비하고 실행하여야 함을 알고 있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문65) 수학여행 장소·날짜 선정, 행선지 짜기, 여행경비에 대한 학생 의견수렴을 통한 의견 반영은 되고 있는가?

면 인	문 항	3-28. 수학여행 장소·날짜 선정, 행선지 짜기, 여행경비에 대한 학생 의견수렴을 통한 의견 반영은 되고 있는가?										
		① 수학여행 장소 및 일정 등 모든 것은 학교에서 하고 희망자 가부만 묻는다.		② 참여 인원 수, 둘러 볼 곳 등 일부만 해당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한다.		③ 장소 및 날짜 등 모든 것을 몇 개의 안으로 제시하여 다수 희망을 물어서 결정한다.		④ 참가학생 대표가 장소 및 날짜와 자료집을 제작·인쇄·배포하고 평가회를 가진다.		⑤ 잘 모르겠다		빈도 합계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성별	여	115	28.0%	39	9.5%	83	20.2%	9	2.2%	165	40.1%	411
	남	149	28.0%	54	10.1%	83	15.6%	17	3.2%	230	43.2%	533
급별	중학교	107	26.1%	32	7.8%	43	10.5%	15	3.7%	213	52.0%	410
	전문계고	22	18.6%	11	9.3%	23	19.5%	3	2.5%	59	50.0%	118
	인문계고	135	32.5%	50	12.0%	100	24.0%	8	1.9%	123	29.6%	416
지역	읍면	72	25.9%	31	11.2%	42	15.1%	15	5.4%	118	42.4%	278
	도시	192	28.8%	62	9.3%	124	18.6%	11	1.7%	277	41.6%	666
합계		264	28.0	93	9.9	166	17.6	26	2.8	395	41.8	944

수학여행 장소·날짜 선정, 행선지 짜기, 여행경비에 대한 학생 의견수렴을 통한 의견 반영에 대한 문항에 '잘 모르겠다.' 41.8%, '수학여행 장소 및 일정 등 모든 것은 학교에서 하고 희망자 가부만 묻는다.' 28.0%, '장소 및 날짜 등 모든 것을 몇 개의 안으로 제시하여 다수 희망을 물어서 결정한다.' 17.6%, '참여 인원 수, 둘러 볼 곳 등 일부만 해당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한다.' 9.9%, '참가학생 대표가 장소 및 날짜와 자료집을 제작·인쇄·배포하고 평가회를 가진다.' 2.8%의 순으로 응답하였다. 바람직한 경우인 학생의견 수렴하는 경우는 30.3%로 나타났다.

문66) 학교홈페이지 접근성(개방 정도)은 어느 정도인가?

문항		3-29. 학교홈페이지 접근성(개방 정도)은 어느 정도인가?										빈도 합계
		① 회원 가입 없이 모든 메뉴에 접근하여 자료를 내려 받고 글을 올릴 수 있다.		② 회원 가입 없이 모든 메뉴에 접근하여 자료를 보거나 내려 받을 수만 있다.		③ 회원 가입을 안 해도 제한된(학교가 공개한)메인메뉴와 서브메뉴에 접근하여 자료를 내려 받고 글을 올릴 수 있다.		④ 회원 가입을 하면 모든 메뉴에 접근하여 자료를 내려 받고 글을 올릴 수 있다.		⑤ 회원 가입을 하면 제한된 메뉴에 접근하여 자료를 내려 받고 글을 올릴 수 있다.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성별	여	28	7.4%	33	8.8%	39	10.4%	167	44.4%	109	29.0%	376
	남	54	11.0%	28	5.7%	51	10.4%	182	37.1%	175	35.7%	490
급별	중학교	44	11.7%	37	9.8%	43	11.4%	137	36.3%	116	30.8%	377
	전문계고	10	10.0%	5	5.0%	14	14.0%	40	40.0%	31	31.0%	100
	인문계고	28	7.2%	19	4.9%	33	8.5%	172	44.2%	137	35.2%	389
지역	읍면	27	10.5%	18	7.0%	19	7.4%	103	40.1%	90	35.0%	257
	도시	55	9.0%	43	7.1%	71	11.7%	246	40.4%	194	31.9%	609
합계		82	9.5	61	7.0	90	10.4	349	40.3	284	32.8	866

학교홈페이지 접근성(개방 정도)을 보면, '회원가입을 하면 모든 메뉴에 접근하여 자료를 내려 받고 글을 올릴 수 있다.' 40.3%, '회원가입을 하면 제한된 메뉴에 접근하여 자료를 내려 받고 글을 올릴 수 있다.' 32.8%, '회원가입을 안 해도 제한된(학교가 공개한)메인메뉴와 서브메뉴에 접근하여 자료를 내려 받고 글을 올릴 수 있다.' 10.4%, '회원가입 없이 모든 메뉴에 접근하여 자료를 내려 받고 글을 올릴 수 있다.' 9.5%, '회원가입 없이 모든 메뉴에 접근하여 자료를 보거나 내려 받을 수만 있다.' 7.0%의 순으로 응답하였다.

문67) 학교홈페이지에 학생들의 생활과 직접 관련된 여러 규정(학칙, 학생선도규정, 학생생활수칙, 학생체벌 혹은 벌점 규정, 학생회 회칙 및 선거규정, 동아리 회칙 등)이 탑재·공개되어있는가?

문항		3-30. 학교홈페이지에 학생들의 생활과 직접 관련된 여러 규정(학칙, 학생선도규정, 학생생활수칙, 학생체벌 혹은 벌점 규정, 학생회 회칙 및 선거규정, 동아리 회칙 등)이 탑재·공개되어있는가?										빈도 합계
		① 대부분 탑재·공개되어 있다		② 대부분 탑재되어 있으나, 회원가입자만 볼 수 있다		③ 부분적인 것만 탑재·공개되어 있다		④ 탑재되어 있지 않다		⑤ 잘 모르겠다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성별	여	79	19.4%	19	4.7%	32	7.9%	27	6.6%	250	61.4%	407
	남	63	11.8%	36	6.8%	63	11.8%	48	9.0%	322	60.5%	532
급별	중학교	62	15.2%	23	5.6%	35	8.6%	39	9.5%	250	61.1%	409
	전문계고	18	15.7%	5	4.3%	6	5.2%	6	5.2%	80	69.6%	115
	인문계고	62	14.9%	27	6.5%	54	13.0%	30	7.2%	242	58.3%	415
지역	읍면	28	10.1%	16	5.8%	22	8.0%	25	9.1%	185	67.0%	276
	도시	114	17.2%	39	5.9%	73	11.0%	50	7.5%	387	58.4%	663
합계		142	15.1	55	5.9	95	10.1	75	8.0	572	60.9	93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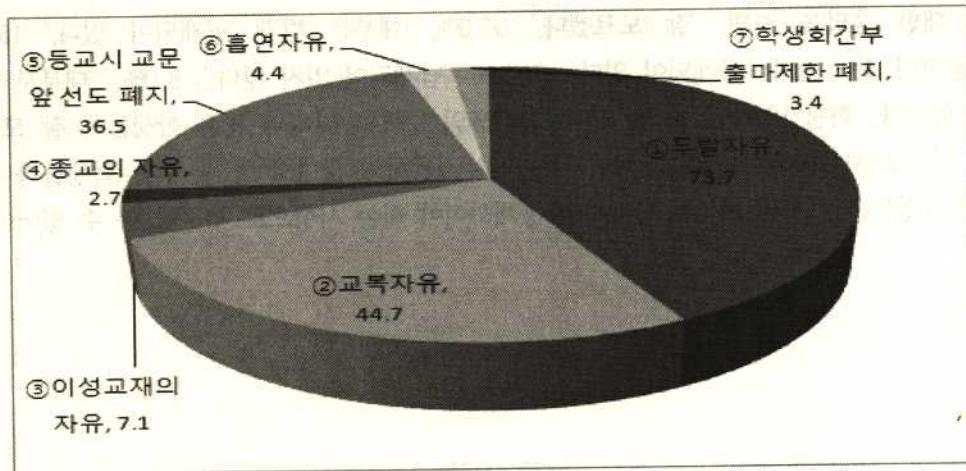
학교홈페이지에 학생들의 생활과 직접 관련된 여러 규정(학칙, 학생선도규정, 학생생활수칙, 학생체벌 혹은 벌점 규정, 학생회 회칙 및 선거규정, 동아리 회칙 등)의 탑재·공개 현황에 대한 응답을 보면, '잘 모르겠다.' 60.9%, '대부분 탑재·공개되어 있다.' 15.1%, '부분적인 것만 탑재·공개되어 있다.' 10.1%, '탑재되어 있지 않다.' 8.0%, '대부분 탑재되어 있으나, 회원가입자만 볼 수 있다.' 5.9%의 순으로 나타나 많은 학생들이 잘 모르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이는 학교홈페이지를 자주 사용하지 않아서 일 것이다. 학생들과 관련된 제 규정들은 학교 홈페이지 탑재하고 공개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누구나 볼 수 있어야 한다.

라. 학생인권 신장 방안 관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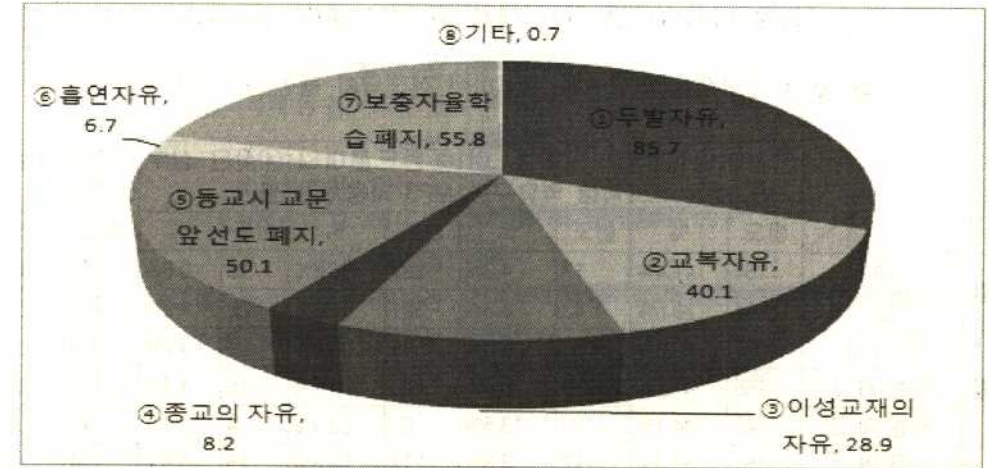
문68) 좀 더 자유로운 학교생활을 위해 가장 먼저 바뀌었으면 하는 내용 두 개만 골라 주세요.

문항		4-1. 좀 더 자유로운 학교생활을 위해 가장 먼저 바뀌었으면 하는 내용 두 개만 골라 주세요														빈도 합계
		①두발자유 (염색포함)		②교복자유		③이성교재의 자유		④종교의 자유		⑤등교시 교문 앞선도 폐지		⑥흡연자유		⑦학생회 간부 출마 제한 폐지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성별	여	250	63.6	190	48.3	23	5.9	13	3.3	190	48.3	6	1.5	14	3.6	393
	남	424	81.4	219	42.0	42	8.1	12	2.3	144	27.6	34	6.5	17	3.3	521
급별	중학교	322	80.7	199	49.9	31	7.8	8	2.0	117	29.3	17	4.3	18	4.5	399
	전문고	87	75.7	42	36.5	4	3.5	2	1.7	42	36.5	11	9.6	1	.9	115
	인문고	265	66.3	168	42.0	30	7.5	15	3.8	175	43.8	12	3.0	12	3.0	400
지역	읍면	207	75.0	124	44.9	22	8.0	7	2.5	74	26.8	18	6.5	10	3.6	276
	도시	467	73.2	285	44.7	43	6.7	18	2.8	260	40.8	22	3.4	21	3.3	638
합계		674	73.7	409	44.7	65	7.1	25	2.7	334	36.5	40	4.4	31	3.4	914

[2008]



[2006년]



좀 더 자유로운 학교생활을 위해 가장 먼저 바뀌었으면 하는 것 세 가지!

순	2006년		2008년	
	바뀌어야 될 것	비율(%)	바뀌어야 될 것	비율(%)
1	두발자유(염색포함)	85.7	두발자유(염색포함)	73.7
2	보충, 자율학습 폐지	55.8	교복자유	44.7
3	등교시 교문 앞선도 폐지	50.1	등교시 교문 앞선도 폐지	36.5

두발자유(73.7%)와 교복자유(44.7%)에 대한 학생들의 요구는 아주 높다. 기성세대의 입장에서는 두발자유가 뭐 그리 중요하겠는가 생각할 수도 있겠으나 요즘 아이들은 몸에 대한 자기 판단을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한다. 오히려 공부보다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으며 그것이 침해당했을 때 느끼는 자괴감은 상상외로 크다. 두발이나 복장 불량을 이유로 벌을 서거나 매를 맞는 모습은 이제 사라져야 할 군사문화의 하나인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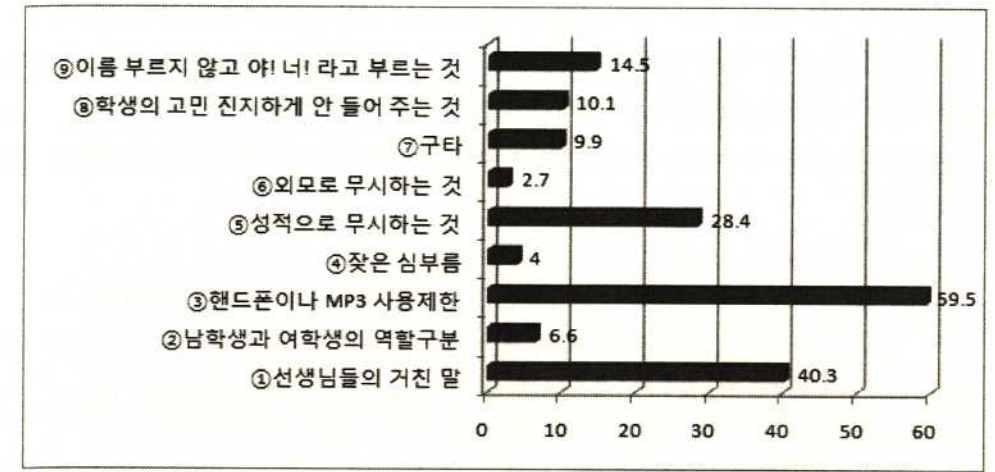
그 밖에 바뀌어야 할 것으로는 이성교재의 자유(7.1%), 흡연의 자유(4.4%), 학생회 간부 출마 제한 폐지(3.4%), 종교의 자유(2.7%)의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두발자유(73.7%)의 경우 남학생이 높지만 교복자유(44.7%)의 경우 여학생의 요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부분의 학교에서 여학생에게는 머리모양에 자율성을 더 허용하는 반면 남학생에게 두발규정을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문69) 학생들의 인권과 관련하여 선생님의 행동 중 가장 바뀌었으면 하는 내용 두 개만 골라 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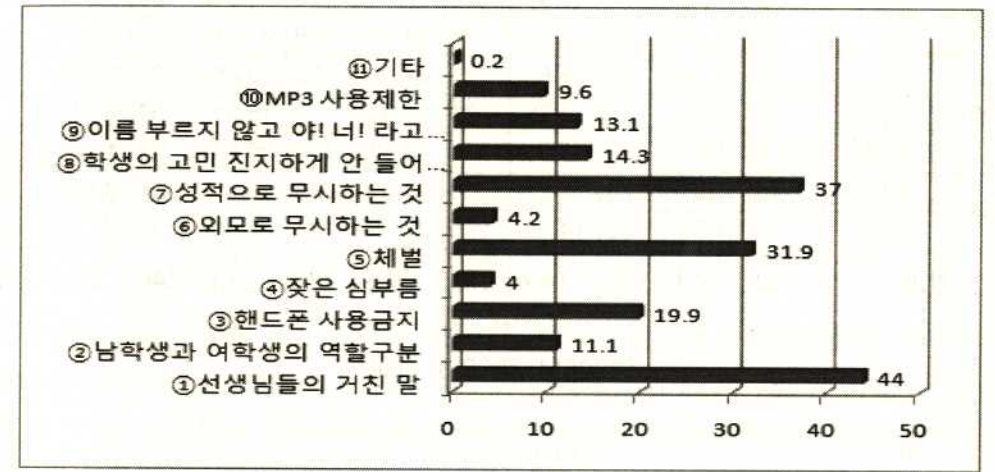
변인		문항 4-2. 학생들의 인권과 관련하여 선생님의 행동 중 가장 바뀌었으면 하는 내용 두 개만 골라 주세요									
		① 선생님들의 거친 말		② 남학생, 여학생 역할구분		③ 핸드폰이나 MP3 사용제한		④ 잦은 심부름		⑤ 성적으로 무시하는 것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성별	여	164	41.4%	17	4.3%	223	56.3%	15	3.8%	142	35.9%
	남	205	39.5%	43	8.3%	321	61.8%	22	4.2%	118	22.7%
급별	중학교	369	40.3%	60	6.6%	544	59.5%	37	4.0%	260	28.4%
	전문계고	168	41.2%	28	6.9%	260	63.7%	18	4.4%	109	26.7%
	인문계고	49	44.1%	15	13.5%	67	60.4%	4	3.6%	17	15.3%
지역	읍면	152	38.4%	17	4.3%	217	54.8%	15	3.8%	134	33.8%
	도시	369	40.3%	60	6.6%	544	59.5%	37	4.0%	260	28.4%
합계		93	34.2%	42	15.4%	159	58.5%	17	6.3%	78	28.7%
		276	42.9%	18	2.8%	385	59.9%	20	3.1%	182	28.3%
		369	40.3	60	6.6	544	59.5	37	4.0	260	28.4

변인		문항 4-2. 학생들의 인권과 관련하여 선생님의 행동 중 가장 바뀌었으면 하는 내용 두 개만 골라 주세요									
		⑥ 외모로 무시하는 것		⑦ 구타		⑧ 학생의 고민 진지하게 안 들어주는 것		⑨ 이름 부르지 않고 야! 너! 라고 부르는 것		빈도 합계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성별	여	12	3.0%	24	6.1%	51	12.9%	68	17.2%	396	
	남	13	2.5%	67	12.9%	41	7.9%	65	12.5%	519	
급별	중학교	25	2.7%	91	9.9%	92	10.1%	133	14.5%	915	
	전문계고	10	2.5%	44	10.8%	24	5.9%	75	18.4%	408	
	인문계고	1	.9%	10	9.0%	10	9.0%	11	9.9%	111	
지역	읍면	14	3.5%	37	9.3%	58	14.6%	47	11.9%	396	
	도시	25	2.7%	91	9.9%	92	10.1%	133	14.5%	915	
합계		3	1.1%	20	7.4%	20	7.4%	35	12.9%	272	
		22	3.4%	71	11.0%	72	11.2%	98	15.2%	643	
		25	2.7	91	9.9	92	10.1	133	14.5	915	

[2008년]



[2006년]



* 학생들의 인권과 관련하여 선생님의 행동 중 가장 바뀌었으면 하는 세 가지!!

순	2006년		2008년	
	바뀌어야 할 선생님의 행동	비율 (%)	바뀌어야 할 선생님의 행동	비율 (%)
1	선생님들의 거친 말	44.0	핸드폰이나 MP3 사용제한	59.5
2	성적으로 무시하는 것	37.0	선생님들의 거친 말	40.3
3	체벌	31.9	성적으로 무시하는 것	28.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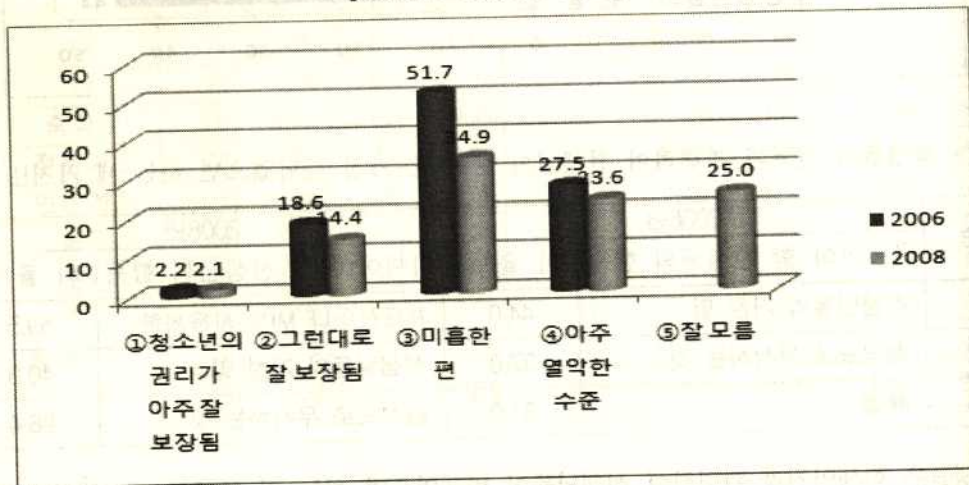
학생들은 학생인권과 관련하여 선생님들이 바뀌었으면 하는 것 중에서 핸드폰이나 MP3 사용을 제한하는 것을 59.5%로 가장 많이 응답하였으며, 그 다음으로 선생님들의 거친 말 사용이 바뀌었으면 좋겠다고 응답(40.3)하였다. 또한 성적으로 학생들을 무시하지 말아야 할 것(28.4%)이며 언어적으로 인격적인 대우를 바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체벌보다도

비율이 더 높다. 체벌의 문제점은 사회적으로 부각된 적이 많아 학교에서도 금지시켜 나가 고 있는 분위기이나 욕설, 또는 모욕감을 주는 말들은 일상적으로 행해지는 것들이며 체벌 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자주 접하게 된다. 요즘 아이들은 언어폭력에 대해 아주 예민하게 반응하며 특히 여러 사람들 앞에서 무시당하거나 모욕당하는 것을 매우 싫어한다. 그러나 학교는 여전히 이러한 아이들의 반응을 반항이라고 인식하고 있으며 또 다른 체벌의 이유로 삼기도 한다.

문70) 전반적인 우리나라의 청소년 권리수준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는가?

변인		문항 4-3. 전반적인 우리나라의 청소년 권리수준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는가?										
		① 아주 잘 보장되고 있다		② 그런대로 잘 보장되고 있다		③ 미흡한 편이다		④ 아주 열악한 수준이다		⑤ 잘 모르겠다		빈도 합계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성별	여	7	1.7%	73	17.4%	158	37.7%	78	18.6%	103	24.6%	419
	남	13	2.4%	65	12.0%	177	32.8%	148	27.4%	137	25.4%	540
급별	중학교	13	3.1%	78	18.6%	121	28.8%	85	20.2%	123	29.3%	420
	전문계고	2	1.7%	15	12.7%	31	26.3%	18	15.3%	52	44.1%	118
	인문계고	5	1.2%	45	10.7%	183	43.5%	123	29.2%	65	15.4%	421
지역	읍면	10	3.5%	43	15.2%	80	28.3%	55	19.4%	95	33.6%	283
	도시	10	1.5%	95	14.1%	255	37.7%	171	25.3%	145	21.4%	676
합계		20	2.1	138	14.4	335	34.9	226	23.6	240	25.0	959

[2006년 2008년 비교]



우리나라 청소년의 권리가 보장되는 수준에 대한 응답은 16.5%만이 긍정적으로 대답하고 58.5%가 부정적으로 대답하고 있어 상당히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가장 큰 원인으로는 청소년을 통제의 대상으로 보며 하나의 인격체로 보지 않는 시각과, 사회

와 학교가 청소년의 권리에 무관심하다는 것이다.

문71) 청소년의 권리수준이 열악하다면 가장 큰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변인		문항 4-4. 청소년의 권리수준이 열악하다면 가장 큰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① 청소년들의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의식과 능력 부족		② 청소년 권리를 보장하는 법, 제도 적 장치부족		③ 입시제도 및 과도한 학습과제		④ 청소년을 미숙하고 통 제받아야 할 존재로 보는 성인 중심적 사고		⑤ 청소년의 권리 행사 능력을 향상 시키는 교육 및 프로그램 부족		빈도 합계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성별	여	47	20.1%	25	10.7%	70	29.9%	78	33.3%	14	6.0%	234
	남	57	17.5%	52	16.0%	75	23.1%	111	34.2%	30	9.2%	325
급별	중학교	45	21.1%	26	12.2%	52	24.4%	73	34.3%	17	8.0%	213
	전문계고	14	27.5%	8	15.7%	7	13.7%	18	35.3%	4	7.8%	51
	인문계고	45	15.3%	43	14.6%	86	29.2%	98	33.2%	23	7.8%	295
지역	읍면	44	30.3%	14	9.7%	36	24.8%	38	26.2%	13	9.0%	145
	도시	60	14.5%	63	15.2%	109	26.3%	151	36.5%	31	7.5%	414
합계		104	18.6	77	13.8	145	25.9	189	33.8	44	7.9	559

청소년의 권리 수준이 낮은 이유로 청소년을 아직 부족하고 통제받아야 할 존재로 보는 성인중심의 사고가 33.8%로 가장 높게 나왔다. 그리고 입시제도와 과도한 학습과제(25.9%),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의식과 능력의 부족(18.6%), 법과 제도의 부족(13.8%)를 중요 이유들로 보고 있다.

이제 사회는 강압적이고 수직적인 인식과 규범체계에서 민주적이고 수평적인 사회로 변화 하고 있다. 특히 학생들의 가치와 인식의 변화는 기성세대들이 생각하는 이상으로 빠른 속 도로 변하고 있지만 성인들이 학생을 보는 사고방식과 경쟁적 입시제도, 그리고 권위주의적 인 학교제도 속에서 자신의 권리를 표현하지 못하고 과거의 관행을 답습하고 있다. 앞으로 발전하는 미래를 이어나갈 학생들이 과거의 인식에 얽매어 있다면 인권과 민주주의라는 세 계의 흐름에 발맞추어 나가기 어려울 것이다.

문72) 청소년의 권리신장을 위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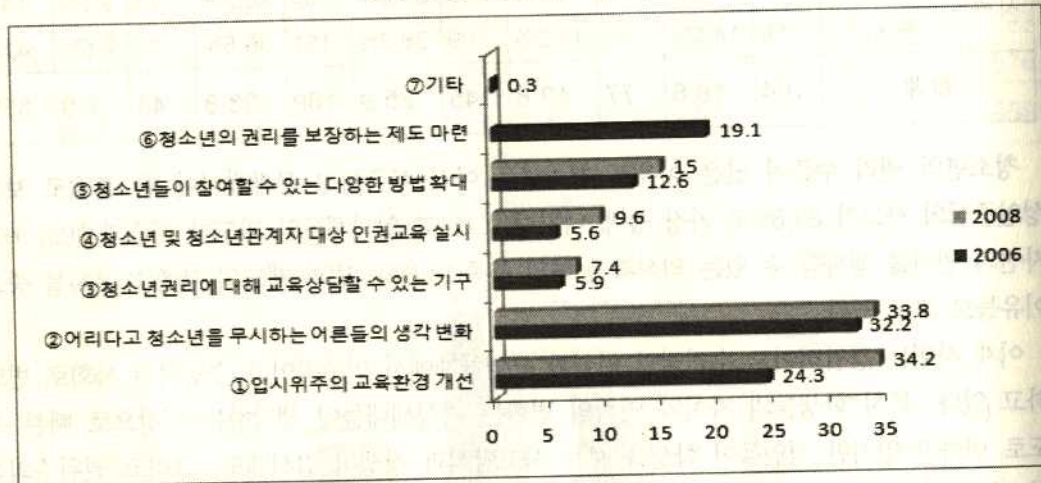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부분이라고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문항	4-5. 청소년의 권리신장을 위해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부분이라고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	---

학생인권 실태조사 설문지

변인	① 입시위주의 교육환경 개선		② 어리다고 청소년을 무시하는 어른들의 인식의 변화		③ 청소년 권리에 대해 교육상담할 수 있는 기구		④ 청소년 및 청소년관계자 대상 인권교육 실시		⑤ 학생자치 활동 등 청소년들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통로 확대		빈도 합계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성별	여	146	37.5%	134	34.4%	23	5.9%	30	7.7%	56	14.4%	389
	남	156	31.5%	165	33.3%	42	8.5%	55	11.1%	77	15.6%	495
급별	중학교	88	23.0%	154	40.3%	34	8.9%	43	11.3%	63	16.5%	382
	전문계고	25	23.8%	46	43.8%	8	7.6%	10	9.5%	16	15.2%	105
	인문계고	189	47.6%	99	24.9%	23	5.8%	32	8.1%	54	13.6%	397
지역	읍면	81	30.9%	86	32.8%	31	11.8%	28	10.7%	36	13.7%	262
	도시	221	35.5%	213	34.2%	34	5.5%	57	9.2%	97	15.6%	622
합계		302	34.2	299	33.8	65	7.4	85	9.6	133	15.0	884

[2006년 2008년 비교]



청소년의 권리 향상을 위해서 가장 바뀌어야 할 것으로 가장 많은 학생들이 입시위주의 교육환경 개선(34.2%)에 응답하여 학생인권의 문제 개선을 위해 가장 시급한 것이 입시폐지 문제임을 보여 주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청소년을 무시하는 어른들의 생각 변화' 33.8%, 라고 응답하고 있다. 이는 학교와 가정, 그리고 사회에서 청소년을 동등하게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인정하지 않는 기성세대의 의식에 청소년들이 얼마나 답답해하고 있는지 알 수 있는 부분이다.

학생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설문조사지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북지부가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경북지역 중·고등학교 학생인권과 관련된 구체적 실상을 파악해, 그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입니다.

여러분의 답변은 우리 교육 현장에서 학생인권에 대한 대안 제시 및 교육정책을 수립하는데 귀중한 자료가 될 것입니다. 조금만 시간을 내어 각 문항에 솔직하게 빠짐없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08년 11월

<설문지 쓰임 및 작성방법>

1. 이 설문조사의 결과는 학생인권 신장을 위한 연구와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 자료 및 통계 결과 발표에만 쓸 것입니다.
 2. 설문지를 받은 분은 정확하고 솔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설문지 문항에 V표를 하거나 직접 서술하시면 됩니다.
- ※ 이 설문 조사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아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교조 경북지부 054) 462-7367

※ 이 설문은 당사자의 동의 없이 사용할 수 없습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북지부

※ 다음 설문 문항을 읽고 각 문항에 V 표시를 하거나 서술해주시기 바랍니다.

여학생	남학생

중학교	실업계고	인문계고	특목고

읍면	도시

하나. 일상생활 관련

1-1. 학교에서 성적이 나쁘다는 이유로 체벌을 받은 적이 있다.

- ①매우 그렇다 ②그렇다 ③그렇지 않다
④전혀 그렇지 않다 ⑤잘 모르겠다

1-2. 학교에서 두발관계로 머리카락을 잘리거나 체벌을 받은 적이 있다.

- ①매우 그렇다 ②그렇다 ③그렇지 않다
④전혀 그렇지 않다 ⑤잘 모르겠다

1-3. 학교에서 복장이 불량하다는 이유로 체벌을 받은 적이 있다.

- ①매우 그렇다 ②그렇다 ③그렇지 않다
④전혀 그렇지 않다 ⑤잘 모르겠다

1-4. 벌이나 징계를 받을 때 자신의 의견진술 기회 등 적절한 절차를 가지고 있다.

- ①매우 그렇다 ②그렇다 ③그렇지 않다
④전혀 그렇지 않다 ⑤잘 모르겠다

1-5. 학교에서 성별에 따른 차별을 하고 있다.

- ①매우 그렇다 ②그렇다 ③그렇지 않다
④전혀 그렇지 않다 ⑤잘 모르겠다

1-6. 선생님들은 학생들이 모욕감을 느끼는 말을 자주 하신다.

- ①매우 그렇다 ②그렇다 ③그렇지 않다
④전혀 그렇지 않다 ⑤잘 모르겠다

1-7. 학교에서 무시당하거나 소외감을 자주 느낀다.

- ①매우 그렇다 ②그렇다 ③그렇지 않다
④전혀 그렇지 않다 ⑤잘 모르겠다

1-8. 장애학생을 배려한 시설이나 프로그램으로 이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있다.

- ①매우 그렇다 ②그렇다 ③그렇지 않다
④전혀 그렇지 않다 ⑤잘 모르겠다

1-9. 학교에서 소지품, 가방, 일기 등 사적 생활 영역에 대한 검사를 받은 적이 있다.

- ①매우 그렇다 ②그렇다 ③그렇지 않다
④전혀 그렇지 않다 ⑤잘 모르겠다

1-10. 우리 학교의 교칙은 학생들의 권리를 잘 보장하고 있다.

- ①매우 그렇다 ②그렇다 ③그렇지 않다
④전혀 그렇지 않다 ⑤잘 모르겠다

1-11. 교칙이나 학생관련 규정을 제정하는데 학생들이 참여하고 있다.

- ①매우 그렇다 ②그렇다 ③그렇지 않다
④전혀 그렇지 않다 ⑤잘 모르겠다

1-12. 정규수업 이외의 교과수업 또는 자율학습 등의 명목으로 정규 수업 시작 이전에 등교하고 있다.

- ①매우 그렇다 ②그렇다 ③그렇지 않다
④전혀 그렇지 않다 ⑤잘 모르겠다

1-13. 학생들의 명시적인 요청 또는 동의 없이 학교의 장이나 교사가 주도하여 야간에 학생으로 하여금 학교에서 추가수업을 받게 하거나 자습을 하고 있다.

- ①매우 그렇다 ②그렇다 ③그렇지 않다
④전혀 그렇지 않다 ⑤잘 모르겠다

1-14. 학교에서 가정환경으로 인하여 차별받은 적이 있다.

- ①매우 그렇다 ②그렇다 ③그렇지 않다
④전혀 그렇지 않다 ⑤잘 모르겠다

1-15. 학교에서 외모로 인하여 차별받은 적이 있다.

- ①매우 그렇다 ②그렇다 ③그렇지 않다
- ④전혀 그렇지 않다 ⑤잘 모르겠다

1-16. 학교에서 특정과목의 성적순으로 학생들을 선발하여 성적우수자반을 편성하여 일반학급과 구분하여 운영하고 있다.

- ①매우 그렇다 ②그렇다 ③그렇지 않다
- ④전혀 그렇지 않다 ⑤잘 모르겠다

1-17. 학교에서는 학생들에게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결정을 할 때 학생들의 의견이 존중된다.

- ①매우 그렇다 ②그렇다 ③그렇지 않다
- ④전혀 그렇지 않다 ⑤잘 모르겠다

1-18. 학교에서 자신의 생각과 양심에 따라 행동할 자유, 종교의 자유가 보장된다.

- ①매우 그렇다 ②그렇다 ③그렇지 않다
- ④전혀 그렇지 않다 ⑤잘 모르겠다

1-19. 학교에서 편안하고 행복감을 느낀다.

- ①매우 그렇다 ②그렇다 ③그렇지 않다
- ④전혀 그렇지 않다 ⑤잘 모르겠다

1-20. 입학부터 지금까지 학교에서 학생인권과 관련하여 내·외부의 강사를 통해 교육을 받은 적이 있다.

- ①없다 ②1회 ③2-3회 ④그 이상 ⑤잘 모르겠다

1-21. [위 질문에 ②, ③, ④에 답한 학생만 체크(✓표시)] 인권과 관련한 교육을 받고 난 후 유익했다.

- ①많이 유익했다 ②조금 유익했다 ③유익하지 못했다
- ④오히려 역효과가 났다고 생각한다 ⑤잘 모르겠다

1-22. 입학부터 지금까지 학교에서 학교폭력예방과 관련하여 내·외부의 강사를 통해 교육을 받은 적이 있다.

- ①없다 ②1회 ③2-3회 ④그 이상 ⑤잘 모르겠다

1-23. [위 질문에 ②, ③, ④에 답한 학생만 체크(✓표시)] 학교폭력예방 교육을 받고 난 후 유익했다.

- ①많이 유익했다 ②조금 유익했다 ③유익하지 못했다
- ④오히려 역효과가 났다고 생각한다 ⑤잘 모르겠다

1-24. 왕따를 당해본 적이 있다.

- ①있다 ②없다

1-25. [위 질문에 ①에 답한 학생만 체크(✓표시)] 왕따를 당했을 때 어떻게 대처했는지 모두 표시해주세요.

- ①혼자 고민하며 괴로워했다
- ②부모님과 상의했다
- ③선생님과 상담했다
- ④인터넷 사이트에서 자신과 비슷한 처지에 있는 학생들과 고민을 나누었다
- ⑤자신을 왕따시키지 않은 친구에게 자기의 고민을 이야기 했다
- ⑥청소년 상담전화나 인터넷 상담사이트에 자신의 고민을 털어놓았다
- ⑦주변의 친한 사람과 의논하였다

*기타:

둘. 학생인권의식관련

2-1. 나는 '유엔 아동, 청소년권리협약' 의 내용에 대해 알고 있다.

- ①매우 그렇다 ②그렇다 ③그렇지 않다 ④전혀 그렇지 않다

2-2. 청소년들은 자기에게 영향을 미치는 정책결정과정에 민주적 절차에 따라 참여할 권리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 ①매우 그렇다 ②그렇다 ③그렇지 않다
- ④전혀 그렇지 않다 ⑤잘 모르겠다

2-3. 청소년들은 아직 완전한 자립능력과 권한을(권리) 갖추지 못했기 때문

에 그들의 자유권에 제한이 가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 ①매우 그렇다 ②그렇다 ③그렇지 않다
- ④전혀 그렇지 않다 ⑤잘 모르겠다

2-4. 학생이 잘못했을 때 교육적인 차원에서 체벌이 불가피하다고 생각한다.

- ①매우 그렇다 ②그렇다 ③그렇지 않다
- ④전혀 그렇지 않다 ⑤잘 모르겠다

2-5. 학교에서 소지품, 두발 및 복장검사를 하는 것은 교육적으로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 ①매우 그렇다 ②그렇다 ③그렇지 않다
- ④전혀 그렇지 않다 ⑤잘 모르겠다

2-6. 어떤 아이들은 왕따를 당해도 마땅하다.

- ①매우 그렇다 ②그렇다 ③그렇지 않다
- ④전혀 그렇지 않다 ⑤잘 모르겠다

2-7. 나는 내 권리가 침해당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분명하게 시정을 요구한다.

- ①매우 그렇다 ②그렇다 ③그렇지 않다
- ④전혀 그렇지 않다

2-8.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자기 권리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

- ①매우 그렇다 ②그렇다 ③그렇지 않다
- ④전혀 그렇지 않다 ⑤잘 모르겠다

2-9. 청소년들에게 의사결정권과 참여권을 주어도 청소년들을 그것을 어떻게 사용할지를 모를 것이라고 생각한다.

- ①매우 그렇다 ②그렇다 ③그렇지 않다
- ④전혀 그렇지 않다 ⑤잘 모르겠다

2-10. 대중매체는 청소년에 대해 부정적이고 비하하는 내용을 많이 보도하고 있다.

- ①매우 그렇다 ②그렇다 ③그렇지 않다
- ④전혀 그렇지 않다 ⑤잘 모르겠다

2-11. 나는 청소년들이 자발적으로 하고 있는 '청소년인권운동'에 대해 알고 있다.

- ①매우 그렇다 ②그렇다 ③그렇지 않다
- ④전혀 그렇지 않다

2-12. 나는 청소년의 정책참여를 위한 청소년자치기구인 '청소년위원회'나 '청소년의회' 활동에 대해 알고 있다.

- ①매우 그렇다 ②그렇다 ③그렇지 않다
- ④전혀 그렇지 않다

셋. 학생자치활동관련

3-1. 새 학년(학기) 학급이 구성되었을 때 학급회의를 통해 학급운영방안을 마련하는가? (예: 학급 내 생활 / 개인별 청소구역 / 급훈 / 소풍 장소 등)

- ①학생들에게 학급회의 의제를 미리 알리고 교사도 함께 참여해서 합의된 학급운영방안을 마련한다.
- ②학급 구성 초기에 담임교사가 학급운영방침을 일방적으로 발표하고 따라오게 한다.
- ③학급운영방침을 만들지 않았으나 사안이 발생하면 학생들의 의견을 듣고 참고(수렴)하여 결정한다.
- ④학급운영방침을 예고하지 않고 그때마다 사안이 발생하면 담임의 판단으로 학급을 운영한다.
- ⑤잘 모르겠다.

*기타 의견:

3-2. 주 1회 주어진 학급활동 시간이 잘 지켜지고 목적에 맞게 활동하고 있는가?

- ①잘 지켜지고 목적에 맞게 활동하고 있다.
- ②잘 지켜지지만 목적에 맞게 활동하는 것은 특별한 사안이 생겼을 때만 활동한다.
- ③시간은 주어져나 활동은 거의 하지 않는다.
- ④그 시간을 전용하여 특정 학년의 경우 수업(보충수업 / 특기적성교육)을 한다.

3-13. 전교학생회 개최 일시 및 의제는 언제 공고/ 통보(전교생 혹은 대의원에 계)되는가?

- ①개최 전날 혹은 당일 ②개최 2-3일 전 ③개최 1주일 전
④학급회의를 통해 구성원들의 의견을 수렴한 후 개최 ⑤잘 모르겠다

3-14. 전교학생회의 때 논의하는 안건(의제)은 대부분 어떤 것인가?

- ①소풍장소 정하기 ②성금모금액 정하기
③교칙개정(학생생활규정) ④학생축제·체육대회기획
⑤잘 모르겠다

*기타 의견:

3-15. 전교학생회의 시간은 대부분 얼마인가?

- ①1시간 이내 ②2시간 이내
③의제에 따라 시간 연장 가능 ④잘 모르겠다

3-16. 전교학생회 개최(시작과 마무리 제외) 중 안전설정 및 의사결정에 학교 선생님(학교장·학생부장·학생부 교사 등)이 참여하는가?

- ①참관만 한다
②학생회장이 도움말을 요청할 때 발언권(참고발언)을 부여한다
③발언권 부여와 관계없이 발언(의사진행발언)한다
④발언권 부여와 관계없이 의사결정발언까지 한다
⑤잘 모르겠다

*기타 의견:

3-17. 체육대회기획·학생축제기획·수학여행지 선정 등을 전교학생회 개최(위원회 구성 등)를 통해 의견수렴·기획·반영된 사례가 있는가?

- ①의견수렴·기획·반영되었다
②의견수렴 및 기획은 되었으나 대부분 반영되지 않았다
③의견수렴 정도에 그쳤다
④대부분 학교에서 제시된 계획에 따를 뿐이다
⑤잘 모르겠다

*기타 의견:

3-18. 학교규칙(학칙/교칙)·학생선도규정·학생회규정·동아리규정·학생체벌규

정·학생생활수칙 등학생의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규칙이나 규정을 개정할 때 전교학생회에서 이 내용을 토론히도록 한 사례가 있는가?

- ①사례가 있다 ②사례가 없다 ③잘 모르겠다 *기타 의견:

3-19. 학교 내에 공식적인(지도교사가 있고 학교에서 인정한) 동아리 수는 몇 개인가?

- ①5개 이내 ②10개 이내 ③20개 이내
④30개 이내 ⑤30개 이상

3-20. 최근(약 2-3년간) 본교의 전체 동아리 활동은 잘 되고 있는가?

- ①더 잘 되고 있다 ②별 변화가 없다 ③예전보다 못하다
④심각할 정도로 어렵다 ⑤잘 모르겠다 *기타 의견:

3-21. [위 질문에 ③,④에 답한 학생만 체크(✓표시)]이러한 동아리 활동이 위축된 원인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여럿일 경우 순서대로 표기해 주세요.

- ①입시교육(보충수업, 야간자습, 강화 등)의 강화로 인해 시간을 내기 힘들다.
②입시교육에 편승한 학교분위기(동아리 활동을 하면 학업, 진학에 지장) 조성
③부모님의 반대
④학원이나 과외를 받는데 지장을 주기 때문
⑤시간과 돈이 낭비되기 때문
⑥활동에 지나친 규제(모든 활동에 반드시 신고, 지도교사 의무화)로 인해
⑦구성원들의 역량 부족으로 인해

*기타 의견:

3-22. [1,2학년 만 체크(✓표시)]주 1회 주어진 특별활동 시간이 지켜지고 있는가?

- ①잘 지켜지고 있다 ②어느 정도 지켜지고 있다
③거의 지켜지지 않는다 ④잘 모르겠다

3-23 [위 질문 ②,③에 답한 학생만 체크(✓표시)] 목적에 맞지 않는 특별활동으로는 무엇을 하는가?

- ①학교 행사(대청소·생활검열·적성, 심리검사·신체검사 등)로 활용한다
②보충수업·특기적성교육 등을 한다

*기타 의견:

3-24. [3학년 만 체크(✓표시)] 주 1회 주어진 특별활동 시간이 지켜지고 있는가?

- ① 잘 지켜지고 있다
- ② 어느 정도 지켜지고 있다
- ③ 거의 지켜지지 않는다
- ④ 잘 모르겠다

3-25. [위 질문 ②, ③에 답한 학생만 체크(✓표시)] 목적에 맞지 않는 특별활동으로는 무엇을 하는가?

- ① 학교 행사(대청소·생활검열·적성, 심리검사·신체검사 등)로 활용한다
- ② 보충수업 혹은 특기적성교육을 한다

*기타 의견:

3-26. 학교급식과 관련하여, 전교학생대표(학생회 대표 또는 급식과 관련된 대표)가 직접 참여해 급식(위생·식단 짜기·영양·)에 대한 학생들의 생각을 말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제도적 기구가 있는가?

- ① 구성되어 있지 않다
- ② 구성은 되어 있으나 형식에 불과하다
- ③ 구성되어 정기적으로 열리고 있으나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건의하는 정도
- ④ 자유롭게 학생의견 개진할 수 있는 정기적 회의를 통해 문제점을 개선하며, 회의 결과를 공개 한다

*기타 의견:

3-27. 학교축제(혹은 학예제, 한마당 등)를 준비·시행함에 있어서 전교학생(학생회·동아리)대표를 구성(예: 학생축제준비위원회)하여 참여하고 있는가?

- ① 구성되어 있으나 형식에 불과하다
- ② 대표성을 띠고 있으나, 행사에 대한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건의하는 정도다
- ③ 대표성을 띠고 있으나, 담당부서 선생님과 함께 축제행사를 준비, 실행한다
- ④ 대표성을 띠고 있으며, 담당부서 선생님과 함께 행사(기획, 준비, 실행)에 참여하며, 행사 후 평가회를 가지고 기록으로 남긴다
- ⑤ 잘 모르겠다

*기타 의견:

3-28. 수학여행 장소·날짜 선정, 행선지 짜기, 여행경비에 대한 학생 의견수렴을 통한 의견 반영은 되고 있는가?

① 수학여행 장소 및 일정 등 모든 것은 학교에서 하고 희망자 가부만 묻는다
② 참여 인원 수, 둘러 볼 곳 등 일부만 해당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한다

③ 장소 및 날짜 등 모든 것을 몇 개의 안으로 제시하여 다수 희망을 물어서 결정한다

④ 참가학생 대표가 장소 및 날짜와 자료집을 제작·인쇄·배포하고 평가회를 가진다

⑤ 잘 모르겠다

* 기타 의견:

3-29. 학교홈페이지 접근성(개방 정도)은 어느 정도인가?

① 회원가입 없이 모든 메뉴에 접근하여 자료를 내려 받고 글을 올릴 수 있다
② 회원가입 없이 모든 메뉴에 접근하여 자료를 보거나 내려 받을 수만 있다

③ 회원가입을 안 해도 제한된(학교가 공개한)메인메뉴와 서브메뉴에 접근하여 자료를 내려 받고 글을 올릴 수 있다

④ 회원가입을 하면 모든 메뉴에 접근하여 자료를 내려 받고 글을 올릴 수 있다

⑤ 회원가입을 하면 제한된 메뉴에 접근하여 자료를 내려 받고 글을 올릴 수 있다

* 기타:

3-30. 학교홈페이지에 학생들의 생활과 직접 관련된 여러 규정(학칙, 학생선도 규정, 학생생활수칙, 학생체벌 혹은 벌점 규정, 학생회 회칙 및 선거규정, 동아리 회칙 등)이 탑재·공개되어 있는가?

① 대부분 탑재·공개되어 있다

② 대부분 탑재되어 있으나, 회원가입자만 볼 수 있다

③ 부분적인 것만 탑재·공개되어 있다

④ 탑재되어 있지 않다

⑤ 잘 모르겠다

* 기타:

넷. 학생인권 신장 방안 관련

4-1. 좀 더 자유로운 학교생활을 위해 가장 먼저 바뀌었으면 하는 내용 두 개

만 골라 주세요.

- ① 두발자유(염색포함) ② 교복자유 ③ 이성교재의 자유
- ④ 종교의 자유 ⑤ 등교시 교문앞선도 폐지 ⑥ 흡연자유
- ⑦ 학생회간부 출마제한 폐지

* 기타:

4-2. 학생들의 인권과 관련하여 선생님의 행동 중 가장 바뀌었으면 하는 내용 두 개만 골라 주세요.

- ① 선생님들의 거친 말 ② 남학생과 여학생의 역할구분
- ③ 핸드폰이나 MP3 사용제한
- ④ 잦은 심부름 ⑤ 성적으로 무시하는 것
- ⑥ 외모로 무시하는 것 ⑦ 구타
- ⑧ 학생의 고민 진지하게 안 들어 주는 것
- ⑨ 이름 부르지 않고 야! 너! 라고 부르는 것

* 기타:

4-3. 전반적인 우리나라의 청소년 권리수준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는가?

- ① 청소년의 권리가 아주 잘 보장되고 있다 ② 그런대로 잘 보장되고 있다
- ③ 미흡한 편이다 ④ 아주 열악한 수준이다 ⑤ 잘 모르겠다

4-4. [위 질문 ③, ④에 답한 학생만 체크(✓표시)] 청소년의 권리수준이 열악하다면 가장 큰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 ① 청소년들의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의식과 능력부족
- ② 청소년 권리를 보장하는 법, 제도적 장치부족
- ③ 입시제도 및 과도한 학습과제
- ④ 청소년을 미숙하고 통제받아야 할 존재로 보는 성인중심적 사고
- ⑤ 청소년의 권리행사 능력을 향상시키는 교육 및 프로그램 부족
- ⑥ 기타:

4-5. 청소년의 권리신장을 위해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부분이라고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 ① 입시위주의 교육환경 개선
- ② 어리다고 청소년을 무시하는 어른들 인식의 변화
- ③ 청소년권리에 대해 교육상담할 수 있는 기구

- ④ 청소년 및 청소년관련자 대상 인권교육 실시
- ⑤ 학생자치활동 등 청소년들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통로확대
- ⑥ 기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북지부

II. 2008 학생인권 포럼

[발제문 1]

경북학생인권의 현황과 과제

이 용 기(전교조경북지부 정책실장)

들어가며

▶ 인권 (법) [人權, human rights] 사람이 사람답게 살기 위해 필요한 것으로서 당연히 인정된 기본적 권리(→ 기본적 인권). 인권에는 모든 개인에게 보편적으로 해당하는 광범위한 가치들이 포함된다.

80년대까지 국가주의 통제 하에서 성인의 인권도 보장되지 않았으니 80년대 말 민주화과정에서 인권에 대한 얘기를 자주하고 국가기구로부터 인권침해에 대한 항변이 사회적 의제로 의미를 가지는 상황을 접하면서 인권에 대해서 옛날에 비해 많이 좋아졌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그러나 학생들의 상황은 어떤가?

학생들은 성장단계에 있다는 이유로 진로선택이나 취미까지도 부모나 학교에서 정해진 길로만 가길 요구받고 있다. 부모나 학교에서 요구하는 길은 확실적인 입시경쟁을 통한 학벌경쟁의 대열에 뛰어들어 친구들을 누르고 좀 더 높은 위치에 올라서기 위해 앞만 보고 달리는 것이다.

1%의 최상위 학벌을 획득한 학생 외에는 모두 낙오자로 만드는 시스템임에도 자신은 낙오하지 않을 것이라고 불안한 자위를 하며 '꽃들에게 희망을'이란 소설에 나오는 애벌레들처럼 더 높은 곳을 향한 그 한길에 동참할 것을 강요당하고 있다.

몇 십 년 동안을 거치며 강요당한 경쟁이 사회적으로 내면화되어 우리사회에서 학벌경쟁의 사회적 신뢰수준은 신앙의 수준이 되었다.

우리사회를 지탱하는 주요한 기제로 학벌이 자리 잡게 되었고 출발선부터 승패가 판가름 난 성적에 대한 무한 경쟁이 수단으로 고착화 되었다. 우리사회는 학벌에 대한 저항을 절대 용납하지 않는다. 개인은 이런 사회구조에 저항하지 못하고 단지 하

위구조에 편입되어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포기할 것인가(때로는 자살할 것인가)를 선택할 수 있을 뿐이다. 도대체 왜 교육적이지도 않고 비인간적인 이런 구조가 교육이란 이름하에 만들어 졌고 개선되기는커녕 더 심화되고 있는 것인가?

출발부터 학생의 권리는 없다

식민지 시대에 도입된 우리나라의 공교육은 교육의 형식만 근대적이고 내용은 식민지 통치를 위하여 피지배계층을 무한 경쟁시켜 식민지 지배를 용이하게 하는 내용을 위주로 만들어졌다. 해방된 후에도 식민지시대 기득권세력들이 그대로 기득권을 이어가면서 식민지시대 교육체제를 극복하지 못하였다. 해방 이후 우리나라 교육은 국가에 충성하는 국민을 기르고 경제성장을 위하여 말잘 듣는 산업 일꾼을 기르는 것이 목적이 되며 주체성을 가진 인간 형성은 교육의 근본적인 목표는 끼어들 틈이 없었다. 이승만 정권은 식민지시대 기득권세력을 보호하여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국민들의 자유를 억압하고, 학교에서 학생들의 자유나 자기결정권 등 학생들의 자율성은 거세시킨 채 권력에 순종하는 국민을 양성하는 도구로 교육을 이용하였다. 그 이후 이어진 군사정권에서도 정권의 정통성이 부족하여 불안한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전체이데올로기 강화의 수단으로 교육을 도구화 하였다. 이에 따라 군사정권하에서 교육은 전체주의적 동원이데올로기에 의한 사회지배체제를 뒷받침하며 학교에서 군사훈련을 실시하는 등 학교를 병영화 하였다.

우리나라는 군사정권하에서 이뤄진 경제성장을 발판으로 자본주의가 정착되게 되고 90년대 민간인 출신이 대통령이 되면서 군사정권을 청산하였지만 전체주의적 사회시스템을 청산하지 못하였다. 그 대표적인 것이 교육이다. 교육계는 식민지시대 기득권 세력을 청산하지 못했듯이 군부독재 하에서 진행된 동원 시스템을 청산하지 못하고 현재에 이르고 있다. 교장은 대대장, 교사는 소대장으로 상관의 지시에 따라 상명하달이 착착 진행되는 곳이 학교이다. 이에 더해 자본주의가 발달하면서 자본이 권력의 우위에 서고, 국가가 자본가의 이해를 대변하듯이 이데올로기 기구인 학교는 자본의 이해를 대변하는 이데올로기를 유포하는 기구로 굳건히 자리매김하였다.

90년대 이후 우리 사회는 시민들의 요구가 표현되며 시민사회가 일부 형성되는 듯하다. 그러나 97년 IMF때 그랬듯이 2008년 경제위기로 나타난 자본주의의 위기 심화로 국민들의 권리 요구가 위축되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 사회에서 가장 늦게 변하는 것이 교육이었듯이 권리에 대한 요구도, 학생인권 에 대한 생각도 사회에 비해 늦게 인식해 가고 있다. 아니 학교에서는 애초 권리가

없었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체제의 변화 없이 형식만 바뀐 우리나라 근대 공교육은 출발부터 학생을 통제하기 위한 도구로 자리매김하던 구조가 독재정권-군사정권으로 이어지며 90년대 들어서는 자본의 요구에 따른 입시경쟁의 강화로 이어져가고 있다. 여기에 학생은 단지 학교 및 교육정책에서 정한 방향에 따라 복종만을 강요당하는 위치 외에 선택할 수 있는 길은 '학생 아님(이것도 의무교육은 불가능)'밖에 없다. 기득권의 경제력에 의한 교육기득권 유지를 위해 학벌 무한 경쟁 정책적으로 학생들을 몰아매고 있다.

어느 고등학교선생님이 학생들에게 '야간자율학습이나 보충수업을 하기 싫지 않나?'고 물었더니 학생 대답이 '잘 모르겠어요.'였다고 하니 기득권층의 경쟁교육이 학생의 의식을 거세시키는 데는 성공했는지 모르겠다는 슬픈 생각이 든다.

입시경쟁의 가열, 학생인권의 후퇴

이러한 교육 기득권유지를 위한 정책은 이명박정권 들어서면서 더 심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명박정부의 교육정책은 ① 고교 다양화 300 프로젝트 ② 영어 공교육 완성 프로젝트 ③ 3단계 대입자율화 ④ 기초학력, 바른 인성 책임교육제 ⑤ 맞춤형 학교지원 시스템으로 입시경쟁을 강화시키는 교육이다. 지난 정부의 속도조절 입시경쟁강화 교육시장화정책보다 더 노골적으로 경쟁을 부추기며 교육에 대한 국가책임은 외면하려고 하고 있다. 이제는 대입을 넘어 고등학교 입학과 국제중 설치에서 보이듯이 중학교 입시도 부활시켜 학교와 학부모들에게 교육에 대한 국가책임을 떠넘기고 있다.

이명박정부 들어서면서 4.15 학교자율화조치로 0교시와 보충수업이 판을 치고 있다. 심지어 초등학교까지 실시되는 일제고사는 초등학교에서 수행평가 위주로 평가한다는 교육과정에 위배되게 년4회 지필평가가 부활하고 있으며 심지어 월말고사까지 부활하고 있다. 그리고 전국적 일제고사의 도입으로 성적에 대한 압박이 강화되고 자신의 성적위치에 대한 반응이 더 민감해져 성적비판 자살이 이제 초등학교까지 나타나기도 했다.

최근 중간고사 성적 떨어져 실망 지침 어긴 지필 평가 논란될 듯(10.29)

일제고사 부활 등 경쟁을 부추기는 교육정책에 대한 우려가 깊어지고 있는 가운데 광주 광산구의 한 초등학교 학생이 성적을 비판해 스스로 목숨을 끊어 충격을 주고 있다.

초등학생이 시험 성적 하락을 이유로 자살한 사건은 광주에서 처음 있는 일이다.

경찰은 유력한 자살 이유로 최근 본 중간조사 성적 하락을 들고 있어 만약 사실로 밝혀질 경우 논란이 예상된다.

현행 7차 교육과정은 수행평가 위주로의 학생 평가를 규정하고 있으며 시험의 총점 합산에 따른 성적 공개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29일 광산경찰서에 따르면 28일 오후 7시30분쯤 광산구 첨단지구 모 아파트 박모(43)씨의 집에서 박 씨의 초등학교 4학년 아들이 숨져 있는 것을 박씨가 발견해 119에 신고했다.

방안에서는 삶을 비관하는 내용의 유서도 함께 발견됐다. 유서에는 '세상이 너무 싫어 먼저 갑니다. 엄마, 아빠 죄송합니다.'라고 적혀 있었다. 경찰조사에서 박 씨는 "일을 마치고 귀가했는데 아무런 인기척이 없어 아들의 방문을 열어 보니 목을 매 있었고, 이미 숨진 다음이었다."고 밝혔다.

경찰은 유서가 발견됐고, 타살 흔적이 없는 것으로 미뤄 자살로 추정하고 있으며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특히 사건 조사과정에서 주변 사람들로부터 '박군이 최근 중간고사 성적이 1학기 때보다 떨어진 것을 비관해 크게 울었다'는 진술을 확보해 박군이 성적을 비관해 자살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만약 중간고사 성적하락이 자살의 주된 이유로 밝혀질 경우 학교와 시교육청도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할 전망이다. 현행 제7차 교육과정에 따르면 초등학교는 지필평가가 아닌 수행평가 위주로의 학생 평가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해 전체 초등학교의 62%에 해당하는 85개 학교가 지필고사를 실시했고, 관리감독의 책임이 있는 시교육청은 여러 교육위원들의 지적이 제기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시정하지 않았다.

김군이 중간고사 성적을 알았다는 것도 문제다. 시교육청의 '초등학교 교육과정 편성지침'은 수행평가 위주의 학생평가로 선다형 집필고사 대신 서술형 평가를 권장한다. 심지어 중·고등학교도 과목별 석차만 공개할 수 있을 뿐 총점 합산에 따른 성적 공개는 할 수 없다.

전교조 광주지부 관계자는 "아이가 중간고사 성적을 알았다는 것은 학교가 지필평가를 실시했고, 어떤 형태로든 성적처리를 했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이것은 명백하게 초등학교 교육과정 편성지침을 어긴 것이다"고 말했다.

정상철 기자 dreams@gjdream.com

또한 10월 실시된 일제고사는 교육과정평가원이 문항을 개발해서 실시하는 '연구조사'인데 일제고사로 변질되어 학생들의 인권을 교육당국이 마음껏 침해하고 있다. 교육과정평가원의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는 학생들의 교육과정에 따른 교육활동의 결과를 연구하여 교육과정연구에 feed-back 시켜 새로운 교육목표나 현장 교육방법 개선에 활용할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그러나 이것을 전국 모든 학교와 학생들을 대상

으로 실시하여 학교와 학부모들에게 국가의 책임성을 떠넘기는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정상적인 교육과정평가원의 연구조사이면 대상자들에 대한 사전 동의나 교육과정 침해를 최소화 하여야 하지만 그런 절차는 전혀 없었다. 이번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를 일제고사로 치르는 과정에서 교육과정평가원은 1) 연구대상자(피검자)의 사전 동의 과정 자체가 아예 없었음, 2) 연구대상(자)의 일상생활에 곤란을 초래, 3) 연구가 피험자에게 스트레스를 줌, 4) 검사 도구의 타당성이 없음, 5) 연구는 '실제'를 왜곡시키는 것 등의 문제가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비윤리적인 조사의 진행으로 학생들이 많은 부담을 안겨 주었다. 그리고 전국 일제고사는 학생 및 학교의 경쟁과 학교 간 비교 자료 산출로 인한 교육과정의 파행 등 더 큰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의 문제가 있다.

또한 교육청은 부인하지만 교사, 학생, 학부모는 '학력부진', '서열 확인', '학교교육의 문제'를 부각시켜 '사교육 시장으로 가라', '학교는 학력증진에 매달려라' 라는 메시지를 전달하며 학교와 학생을 압박하고 있다.

사교육시장으로 갈 돈이 없는 학생들은 낙담하며 부모를 원망하라. 이런 메시지를 강화하면서 수학능력시험 등 평가는 더 어렵게(이번 수능 가채점에서 수리능력의 난이도가 높아져 평균 20점 하락 예상)출제하여 이제 학생 개인의 경쟁을 넘어 부모의 사회경제적 배경에 따라 학생들을 양극화시키는 극단적 가르기 교육을 자행하고 있다.

12월 23일 중학교1,2학년 일제고사도 마찬가지로 입시경쟁교육을 강화하는 수단으로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근거도 없이 진행하는 것이다. 교육의 이름으로 공교육기관에서 실시되는 교육과정 운영이 반인권의 극치를 달린다고 할 수 있다.

현재도 3일에 두 명꼴로 학생들을 자살로 몰아가는 교육체제가 판을 치는 이 사회가 정상적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런데도 교육에 대한 불만과 문제제기가 많지만 어느 누구 응답하는 사람 없이 그냥 아무 일 없었던 듯이 일제고사는 강행되고 학생들에 대한 통제는 계속되고 있다.

우리사회는 학생을 미성숙한 존재로 규정지면서 학교생활에 대한 통제와 인권침해가 확대 강화되고 있다. 학교의 명예를 위해 학생은 아침 7시30분에 등교를 해야 하고 밤 10시까지 자율을 가장한 자율학습을 받아야 한다. 한사람도 빠지지 않고 모 두다!!

사설모의고사도 자율적으로 다 쳐야하고 보충수업도 자율적으로 다 희망해야 하는 것이 한국의 고등학교 현실이다. 중학교도 점점 강화되고 있다. 아침밥은 좋은 학교 가려면 사치, 잠은 좋은 학교 가기 싫으면 자, 좋은 학교 가기위해 학교분위기 잡으

려 적당한(?) 체벌 허용. 학생들은 이러한 학교의 폭압적 구조에서 순종만을 강요당하고 반인권을 정상적인 과정으로 내면화 시키며 살아가고 있다.

학생의 자기결정권 쟁취를 위한 저항

일제시대 근대 공교육이 형성되며 식민지 피지배 국민으로 우리사회의 특권층이 학교를 선택할 수 있었다. 특권층이어도 학교를 다닌 학생들 중 식민지 피지배 국민으로 식민지배에 대한 저항이 있었다. 그리고 식민지 피지배계급의 저항 정신이 살아있던 해방이후 사회적으로 주체적 의사결정에 대한 욕구가 표현되기도 하고 사회를 반영한 학생들의 저항이 살아 있는 상황에서는 고등학생을 중심으로 학생들이 사회의 불의에 저항하는 사건들이 일어났었다. 역사적으로 우리 사회에서 중·고등학생이 일어나면 굉장한 파급력을 가졌다. 그런데 4.19 이후 중·고등학생이 조직적으로 저항한 경우는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

군사독재정권시대에는 국가 통제기구에 의한 폭압적 사회통제로 사회전체가 숨을 죽이며 권리에 대한 요구를 하지 못하였다. 학생들은 이때부터 학교의 병영적 통제에 순종만을 강요당하며 생활하였다. 80대 들어서면서 90년대 초까지 대학생들이 사회적·정치적 요구를 외치며 학생운동을 활발하게 전개하였고 87년 이후 노동운동이 활발하게 사회적 요구를 가지고 저항해오고 있다. 2000년도 들어서면서 대학생운동은 명맥을 유지하는 곳도 없을 정도로 경쟁이데올로기에 편입되어 대학생들은 12년간 학벌경쟁을 한 것에 이어 취직을 위한 경쟁으로 내몰리고 있다.

90년대부터 강화된 입시경쟁이 소모적이고 출혈적으로 진행되는 흐름의 한계상황을 보이고 있다. 학생들의 인내가 한계상황으로 치달아 일부 저항이 나타나고 있다. 여기에 대해 교사나 학부모들은 일부 낙오자의 자학적 표현형식으로 치부하는 경우가 있는데 최근 학생들의 모습은 산발적 저항 상황을 뛰어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 ▶ 2004. 6. 16. 대광고 강의석 학생은 강제 예배에 대한 반대 의사를 교내방송을 통해 내보낸 데 이어 서울시 교육청 앞에서 1인 시위.
- ▶ 2006. 5. 8. 동성고 오병현 학생은 학교의 부당하고 상습적인 인권침해를 고발하기 위해 탄압을 무릅쓰고 교문 앞 1인 시위.
- ▶ 2008. 5. 2 이후 학교자율화 반대, 미국 광우병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

- ▶ 2008. 10. 21. 고교 2년생이 학생회장으로부터 구타를 당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한 강원 강릉시 한 고교 학생 500여명이 21일 강릉시내에서 숨진 학생의 영정과 관을 들고 학교폭력을 규탄 시위.

올 5월 2일 청계광장에서 열린 촛불집회에는 교복을 입은 중고등학생들이 수 천명 참가하였다. 그동안 입시교육으로 자기결정권을 박탈당하고 그것이 내면화되어 저항을 하지 못할 것 같던 학생들이 거리로 나온 것이다. 그것도 미친 교육 반대, 미친 소 반대라는 분명한 요구를 내걸고 적극적으로 자신들의 방식으로 발언하고 인터넷을 통하여 조직하고 참여함으로써 5월 이후 촛불투쟁을 촉발시켰다.

우리는 학생들의 저항 방식의 다양성과 창의성 그리고 폭발성을 보면서 학생들의 주체성과 자유에 등 자신들의 인권을 지키기 위한 활동의 가능성을 보았다. 이명박대 통령이 높은 지지율로 당선되고 이후 한나라당을 포함한 보수 진영에서 국회의석을 2/3가까이 휩쓸면서 한동안 시민사회와 학생인권 등에 대한 저항의 조직이 만만치 않겠다는 판단을 하였다. 그러나 학생들을 중심으로 이명박정권의 실정에 대해 저항을 표현할 수 있는 힘을 보고, 학생들의 사회적 문제에 대한 의제를 공론화시켜내는 방법을 보고, 이를 매개로 한 조직의 참여를 촉발시켜 대규모 저항으로 연결되는 형식을 보고 혼란에 가까운 고민에 빠졌다. 청소년 활동가들이나 교육운동단체에서 전혀 예상치 못한 청소년들의 참여는 앞으로 조직된 단체들이 계속 고민하고 배워나가야 하겠다. 앞으로 학생들은 자신의 주체적 의사결정권 요구에 대한 연대의 강화와 조직적이고 지속적인 자치를 통하여 집단적 의사표시의 가능성을 고민해 들어가는 과제를 안고 있다.

학생인권과 교사

이런 상황에서 교사들은 어떤 역할을 하였는가?

학생들은 교사들과 떨어질 수 없는 존재이다. 상호 존재의 의미가 되기 때문이다. 근대 공교육체계가 형성되면서 자본주의의 순종적 노동력을 양산하기 위한 학교체제의 운영에 중요한 임무를 맡고 있는 것이 교사이고 대상이 학생이다.

지금의 학교체제는 학생들을 효과적으로 통제 및 관리하기 위해 학생들을 무한경쟁체제로 떠밀어 놓고, 정해진 지시를 잘 따르고 경쟁에서 이기는 학생에게는 좋은 학벌이라는 보상을 내리고 잘 따르지 않는 이에게는 낙오자로 낙인을 찍는다. 교사는 이러한 학교체제에 예속되어 있으며 체제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존재적 위치에 있다.

교원평가에 대하여 많은 국민이 동의하는 것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교사는 학교체

제에서 주요한 임무를 맡고 있는 외형을 가지고 교사와 학생·학부모가 대립적 관계로 설정되는 것이 현재 상황이다. 그래서 교사를 감옥의 간수로 학생을 감옥의 죄수로 관계설정 되기도 한다.

슬픈 일이지만 교사의 역할이 체제적 관점에서 위상 지어지는 것을 부인할 수도 없다. 단지 이는 교육이 무엇인가? 무엇이어서 하는가? 자본주의 경쟁교육이 교육이라 할 수 있느냐? 라는 물음의 결과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

현재 참교육실현을 위한 전교조의 활동과 학교체제가 충돌하는 부분이기도하고 앞으로 학생인권을 더 적극적으로 고려하여 학생과 연대하며 주체성을 가진 인간교육을 해 나갔을 때 기득권의 교육체제에 대해 더 많은 갈등이 예측되는 지점이기도 하다.

교사들은 교사의 역할을 학생 통제로 보면서 학생들에게 폭력적인 수단을 사용하거나 교사의 권위를 폭력적 방법으로 유지하면서 교권을 지키는 것으로 인식되거나 강변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 특히 조중동을 비롯한 언론과 기득권세력은 폭력적인 학교구조를 유지하는 흐름으로 자극적인 기사를 뽑아내기도 한다. 학교에서 학생인권을 얘기 하면 학교관리자와 교사들이 거부 반응을 일으키기도 한다. 이러한 생각은 전교조 조합원 내에도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다.

그런데 학교 현장에서 교권의 과도한 주장으로 학생과 갈등하기도 하고 학생인권의 보장을 내세우면서 갈등하기도 한다. 교권과 학생인권을 대립적인 것으로 보는 것이다. 소통의 문제이다. 학생은 자신의 삶의 존엄성을 인정받고 자기 삶에 대한 자기 결정권을 인정받는 것에서부터 학생인권이 지켜질 수 있다. 즉 동등한 관계에서 소통이다. 분명한 것은 학생인권을 지키지 않으면서 교사의 인권이 지켜지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교사와 학생을 대립적 관점이 아니라 연대의 관점으로 보는 것이 필요한 지점이다.

인간화 교육, 자기 결정권 보장

많은 학교에서 학생들에 대한 인권침해가 일상적으로 일어났다. 집에서 학생은 보호의 대상이나 순종해야 할 대상이었을 뿐, 독자적인 인권의 주체로 인정받을 수 없었다. 학교 밖에서도 학생은 선도의 대상이면서 사회의 갖은 폭력과 부당함에 노출되었다.

이러한 학교의 억압적이고 비민주적인 구조를 극복하고 경쟁과 폭력으로 죽어가는

학생들을 살리기 위해 89년 전교조가 결성되었다. 인간화 교육을 표방하며 결성한 전교조는 참교육실천활동, 부조리 퇴치, 비민주적 교육정책을 바꾸기 위해 창립하여 정권과 기득권의 탄압에도 견디며 합법화를 이루어 냈다.

그러나 합법화이후 조합원의 급격한 확대로 현장 실천 활동에서 통일성과 집중성을 살리지 못하고 인터넷을 통한 정보 소통의 활성화로 차별화된 내용을 담보하지 못하여 새로운 참교육 실천의 내용을 요구받는 상황에 직면하였다.

특히 인간화교육과 민주교육의 이념인 학생인권에 대한 실천에서 조직적으로 분명한 의지를 가지고 실천을 하지 못하였다. 현재 참교육 이념에 대한 정리와 학생인권에 대한 내부적 통일을 이루고 실천을 결의해 나가야 할 시점이다.

여전히 학생의 인권을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 거부감, 당혹감을 보이거나 학생들을 버릇없게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어른들이 많다. 그러나 자신의 인권을 존중받으면서 자란 사람만이 다른 사람의 인권도 잘 존중할 수 있다. 그래서 인권을 존중받는다는 것은 자기 자신의 존엄성에 대한 자각과 다른 사람에 대한 존중감을 기르는 것이다.

학생도 사람이고 사회의 구성원으로 분명히 인권의 주체이다. 성장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보호를 받아야 할 때도 있지만, 그것보다 근본적인 것은 학생도 사람이고 따라서 인권을 가진 온전한 주체라는 것이다.

교육의 본질이 자유와 주체성에 있다고 했을 때¹⁸⁾, 학생인권의 보장은 인간으로 교사와 참된 만남을 만들어 나가는 인간화교육의 실현이 필수이다. 그리고 학생도 인권의 주체라는 분명한 인식을 통하여 학생들의 자기 결정권이 보장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의 입시경쟁구조에서는 인간화교육, 학생인권의 보장이 먹혀들어갈 틈이 별로 없다. 이에 대한 대응으로 학생, 학부모, 노동자, 시민들이 함께하는 입시폐지대학평준화 국민운동본부가 만들어져 매년 11월 공동행동을 진행하고 자전거 대행

- 18) 1. 교육은 인간의 자기실현의 기관이라는 것. 교육은 사람됨의 과정이라는 것.
2. 교육의 본질은 자유와 주체성에 있다는 것.
3. 주체성은 오직 만남 속에서만 실현된다는 것.
4. 누구도 자기를 교육할 수 없다는 것. 교육은 만남에서 시작되고 만남을 통해 이루어지며 참된 만남을 지향한다는 것.
5. 교육자와 피교육자의 만남은 어느정도 비대칭적일 수밖에 없다는 것.
6. 그 비대칭성은 주체성과 자유의 신장을 위한 것일 경우에만 정당화될 수 있다는 것.
7. 교육적 만남의 비대칭성으로부터 교육비 도구화될 위험이 생겨난다는 것.
8. 교육의 진리는 참된 만남의 실현에 있다는 것.

김상복교수의 '교육공공성 강화와 참교육' 중

진, 토론회를 통하여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자 하는 것은 한 축으로 의미를 가진다 하겠다.

학생들은 스스로 학생인권의 주체로서 자율을 가장한 야간타율학습과 자율적 선택을 가장한 타율적 강제 보충수업과 0교시, 휴일등교, 사설모의고사 등 경쟁위주의 교육에서 학생들의 자기결정권이 지켜질 수 있도록 요구를 넓혀나가야 한다.

또한 자치를 가장한 폭력이 강릉의 고등학생 폭력 사망사고를 낳았듯이 학교의 학생통제를 위해 왜곡된 자치활동도 새롭게 정립되고 활동안내와 보장이 이뤄질 수 있는 정보제공과 지원을 요구해나가야 한다.

학생인권, 지역에서부터

1989년 11월 20일 유엔총회는 '유엔아동권리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CRC)'(이하 협약)을 만장일치로 채택하였다. 협약은 전문과 52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 중 40개 조항이 아동의 권리 내용을 담고 있으며, 나머지 조항들은 당사국의 협약비준과 이행 조치들에 관련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협약은 적용 대상을 18세 미만 모든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고, 무차별의 원칙으로 아동의 권리는 인종, 국적, 종교를 초월하여 적용되며, 아동 최선의 이익우선 원칙으로 모든 조치, 정책들은 어린이에게 가장 유익한 방향으로 결정된다는 기본원칙을 전제로 아동이 생존할 권리, 보호받을 권리, 발달할 권리, 참여할 권리의 4가지 기본권리를 누려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

협약에는 아동의 교육받을 권리, 생명권, 신체의 자유, 표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결사·평화적 집회의 자유, 사생활의 비밀보호, 정보 접근권, 휴식권 등의 인권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대한민국은 1991년 유엔아동권리협약을 비준했는데, 헌법은 제6조 제1항에서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은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라고 규정하고 있어 아동권리 협약을 대한민국 정부가 비준¹⁹⁾함으로써, 이 협약은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지니게 되었다.

- ▶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19) 다만, 우리나라는 제9조 제3항, 제21조 가항 및 제40조 제2항 나호 (5)의 규정을 유보하면서 비준하였다.

보장할 의무를 진다.

- ▶ 교육기본법 제12조에는 “학생을 포함한 학습자의 기본적 인권은 학교교육 또는 사회교육의 과정에서 존중되고 보호 된다”
- ▶ 초·중등 교육법 제18조 4항 (학생의 인권보장) 학교의 설립자·경영자와 학교의 장은 「헌법」 과 국제인권조약에 명시된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여야 한다.

국제아동권리협약과 국내법에 의하여 포괄적으로 규정된 학생인권 규정에도 불구하고 학교현장은 억압과 폭력이 판치는 상황이다. 그래서 인권은 교문 앞에서 멈춘다고 한다. 이런 의미에서 학생 인권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은 생활단위인 지역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그런 의미에서 지역에서 실현 전략에 대한 부분은 일본의 가나가와현 가와사키 시의 사례는 중요한 참고자료가 되겠다. 광주광역시 학생인권조례 추진 자료에 실린 가와사키시의 추진 상황을 소개한다.

일본의 가나가와현 가와사키 시에서는 2000년 12월 21일 「가와사키시 아동의 권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2001년 4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가와사키시의 조례는 일본의 다른 아동권 관련 조례에 비해 종합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²⁰⁾

가와사키시에서 '아동의 권리에 관한 조례'를 만든 이유는 몇 가지로 설명되고 있다. 우선 국제조약이 만들어졌지만, 실제로 사람들은 그 내용을 잘 모른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한 도시에서라도 조례를 만들어서 국제조약의 정신을 좀더 구체화하고, 지역 주민들과 청소년들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두 번째로 국제조약에서는 원칙밖에 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구체적인 인권구제 절차 같은 것은 조약에 나오지 않는데, 조례로서 그것을 만들어줄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가와사키 시 조례에서는 '인권옴부즈맨'이라는 기구를 통해서 아동 인권 침해사실에 대해 상담, 조사, 사후조치를 하도록 하였다.

세 번째로 아동에게도 참가의 기회, 자기결정의 기회를 보장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아동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는 아동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하게 한다든지, 아동회의를 설치하게 한다든지 하는 방식으로 아동에게 어릴 때부터 자치적인 활동의 기회, 정책 결정과 행정에의 참가기회를 부여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가와사키시에서는 아동회의를 두고 운영하고 있다.

가와사키 시의 '아동권리조례'는 공무원이나 전문가가 만든 것이 아니다. 이 조례

20) 子どもの権利研究, 第2號, 2003.2., 日本評論社, 8p

를 만들기 위해 가와사키 시의 어른들과 청소년들은 2년간 200번이 넘는 회의를 했다고 한다. 그런 과정에서 많은 어른들과 어린이·청소년들이 인권에 대해 새롭게 배우고 느낄 수 있었을 것이다. 그 결실로 만들어진 것이 '아동권리조례'이다.

가와사키시에서는 조례 제정 이후에 담당부서(아동 권리 담당부서)를 신설하고 여러 관련 부서들과 조정하는 조직인 '아동권리 시책추진 부회'를 설치하기도 했다. 또한 11월 20일을 "가와사키 아동권리의 날"로 정하여 각종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그리고 조례를 소개하는 팸플릿(아동용, 일반용)과 권리학습용 교재를 만들고, 교육과 연수회를 개최하고 있다. 가와사키시 아동회의를 설치하여 80명의 아동을 공개모집하여 회의를 열고 있다. 인권옹부즈맨²¹⁾을 통해 아동인권에 관한 상담업무와 인권구제업무를 하고 있다. 공개모집한 시민을 포함한 10인의 아동권리위원회를 두고 가와사키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여러 시책들을 검증하고 있다.

최근 일본에서는 가와사키시 외에도 다른 지방자치단체들이 아동에 관한 조례를 많이 제정하고 있는 추세이다. 일본 효고현 카와니시(川西)시에서 "아동의 인권옹부즈퍼슨에 관한 조례" (1998년)가 제정된 이후,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아동인권옹부즈퍼슨(Ombudsperson)에 관한 조례나 아동권옹호위원회 같은 기구를 설치하기 위한 조례가 제정되고 있다. 또한 아동인권의 실현을 위한 시책추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기도 하는 등 하나의 중요한 흐름을 형성하고 있다.

가와사키시의 경험에서 확인하듯이 학생인권은 지역의 인식확대와 더불어 조례가 만들어져야 한다. 이를 통하여 학생들의 주체적 요구에 부응하는 형태로 교사, 학부모, 시민들이 학생인권을 지키기 위한 연대를 강화하고 자치단체의 참여를 강제하여야 지켜질 수 있다.

맺음말에 대신하여

인권은 법체계의 정비만으로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더 중요한 것은 지역주민들의 학생인권에 대한 인식의 공유가 우선되어야 한다. 지역주민에는 학부모, 교사, 정책입안자가 포함된다.

21) 인권옹부즈퍼슨(ombuds person)은 어린이와 남녀평등에 관한 시민의 인권침해에 대해 쉽게 편하게 상담이나 구제를 신청할 수 있는 인권구제기관으로 다음과 같은 사업을 실시한다(2002년 12월 23일 푸른부천²¹⁾에서 개최한 "부천-가와사키 아동인권조례 간담회 자료집"중에서).

1. 인권침해에 관한 상담을 받아 조언하고 지원 2. 인권침해에 대한 구제신청을 받아 필요에 따라 조사
3. 당사자간을 조정하고 관련기관의 권한과 기능을 활용할 수 있도록 연계. 4. 시 소속기관에 대해 제도 개선의 의견표명과 시정(是正) 권고를 실시 5. 인권에 관한 과제에 대해 의견공표

그동안 교육운동은 주로 전교조 운동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 전교조 활동이 내용적 도약을 요구받고 있는 상황에서 학생, 학부모, 교사가 함께 의제를 제출하고 연대하여야 교육문제의 해결이 가능하다는 교훈을 최근 많이 느끼고 있다.

교육문제가 계급문제, 계층의 문제로 된 상황에서 어느 한 부분이 나선다고 해결될 수 있는 사안을 넘어섰다.

앞서 확인했듯이 현재 교육은 주체성을 상실한 순종형 인간을 양산하여 기득권유지를 안전하게 가져가는 것이 교육이라고 우기는 5% 가진 자들을 위한 교육이다. 이에 대해 우리는 교육의 본질을 얘기할 때이다. 교육의 본질은 자유와 주체성이다. 자유와 주체성을 기를 수 있도록 교사와 학생의 관계설정을 해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당장은 교칙(학생생활규정)문제에서 출발할 수밖에 없지만 학생인권의 인식을 교칙을 포함한 더 넓은 범위로 확대하고 교사-학생의 강력한 연대를 바탕으로 지역이 결합하는 운동으로 학생인권을 지켜나가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런 우리교육의 경쟁, 학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활동을 함께해나가야 할 것이다.

학생들이 학생인권의 문제를 자기문제로 인식하고 스스로 문제해결에 나설 수 있도록 교사들이 도우며 교사-학생, 지역연대를 강화하여 사회 전체적으로 인권을 존중하는 사회로 만들어나가야 한다. 이번 학생인권포럼이 학생인권을 지역적으로 지키고 실천해나가는 행동의 첫출발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며 발제를 정리하고자 한다.

학생인권의 현황과 과제

편 다 이(포항두호고 3학년)

“세상 참 많이 바뀌었다. 정말 좋아졌어!” 라고 사람들은 말한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권리와 자유를 인정해 주기를 원하는 욕구가 강해지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자유와 권리 인정. 그것은 학생들 역시 마찬가지이다. 지금까지는 그저 어른들의 말씀을 듣는 아이였다면 이제는 인권을 가진 한 국민으로서 학생인권에 대한 강한 욕구를 드러내고 있다. 부모나 학교에서 바라는 대로 행동하는 아이가 아닌, 나 자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당당히 말할 수 있는 학생으로 보아달라고 우리 학생들은 말하고 있다.

지금은 무한경쟁사회이다. 그것은 우리 학생들도 피해갈 수 없다. ‘1등 아닌 보통들에게엔 박수조차 남의 일인 걸’이라는 가사 말처럼, ‘2등은 기억되지 않는다.’라는 문구처럼 누군가에게 기억되기 위해, 박수받기 위해 경쟁은 더욱 치열해지고 있다. 학부모와 교사들은 그저 공부만을 강요하며 그 치열한 경쟁 속에 우리를 밀어 넣고 있다. 야간자율학습이나 보충수업도 자기 의사와는 상관없이 무조건 참여해야 한다. 무조건 정해진 대로 정해주는 대로 따라야 하는 것일 뿐이다. 야간자율학습이나 보충수업이 싫지 않느냐는 질문에 잘 모르겠다고 대답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자신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어떤 필요성 같은 것은 전혀 인식하지 못한 채 그대로 따라왔기 때문이다. 자신이 무엇을 하고 싶어 하든 어른들에게는 그저 철없는 아이의 꿈일 뿐이다. 가수 이승기의 음악시간이라는 노래를 들어 보았는가. ‘왜 우리가 잘하는 걸 인정하지 않으며 칭찬하지 않는 걸까. 왜 음악을 잘하는데 다른 것을 배우며 다른 길을 가게 하나요.’에서 알 수 있듯 이미 우리들의 의사는 무시된 지 오래 전이다. 음악이든, 미술이든, 그게 무엇이든 공부가 아닌 다른 어떤 것도 인정해 주지 않는다.

학생들의 인권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지만 여전히 현실은 그러하지 못하다. 우리의 요구에 어른들은 ‘그만큼 인권을 존중해줬으면 됐지, 뭘 더 바라느냐’ 하는 식이다. 어른들의 꾸짖음에 우리 학생들에게는 “그게 아니라고요...” 라는 말이 허용되지 않는다. 어떠한 꾸짖음에도, 어떠한 억울함이 있어도 첫마디는 무조건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이어야 한다. “잘못했습니다.” 라는 말이 나올 때까지 찬바람이 부는 저녁에 교문 앞에서 한 시간 반 이상을 엎드려뺨쳐 벌을 받아야 하며 몽둥이나 꿀밤 등의 체벌 아닌 체벌을 받아야 하는 것이 현실이다. 11월 18일, SBS ‘긴급출동 SOS’에서는 한 초등교사의 체벌에

관해 방영되었는데, 그 내용은 숙제를 하지 않아서, 말을 듣지 않았다는 이유로 80대를 때렸다는 이야기였다. 학부모들이 학교에 항의를 해도 학교에선 아무런 조치를 취해주지 않았다. 학생의 잘못된 행동에 교사가 매를 들 수는 있지만 어린 학생에게 80대는 너무 가혹한 일이 아닐 수 없다. 학생의 인권은 아예 무시된 행동이 아닌가.

지금 당장 교육 정책을 바꿔달라는 것이 아니다. 학생들의 모든 행동들을 그대로 받아 줄 것을 요구하는 것도 아니다. 밑에서부터, 작은 것부터 하나씩, 하나씩 실현시켜 줄 것을 요구하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회의의 방식부터 변화를 시켜보는 것은 어떨까. 현재 대부분의 초, 중, 고등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대의원 회의는 학생들이 참여해 토론을 한 후, 그 결과를 교사에게 전달하는 식이다. 하지만 이제는 학생과 교사가 함께 어우러진 회의로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어떠한 문제에 관해 학생들과 교사들은 각각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으며, 서로가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에서는 왜 그러한가를 서로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학생들은 무조건 “해 달라!” 라고 외치기보다, 교사들은 무조건 “안 돼” 라고 하기보다는 서로 대화를 통해 이해관계를 성립시키고, 서로의 의견을 상호보완 하면서 학생의 인권실현에 한발 다가가기기를 바란다.

더 이상 학생들은 수동적인 존재가 아니다. 능동적인 사고와 행동을 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책임을 질 줄 아는 존재이다. 학생인권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지만 여전히 학생들이 수동적인 존재로 인식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어른들의 사고방식에 학생들을 끼워 맞추려하기 때문이다. 물론 학생들이 부족한 점이 많은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그것을 무조건 부정적으로 바라보지 않고 우리의 생각을 인정해주되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하는 것이 옳은 방법이 아닐까.

어른들과 지금의 학생들은 세대가 다르기 때문에 보고 자라고 생각하는 것에 차이가 있다. 그렇기에 학생들과 어른들 사이에 가장 필요한 것은 상호 이해관계의 성립과 인식전환이라고 생각한다. 학생들은 무조건 목소리를 높이기보다는 어른들의 생각을 받아들일 줄 알아야 한다. 또한, 어른들은 무조건 얼굴 찌푸리고 그저 우리의 행동이 일탈이라고 생각하기 보다는 학생들이 진정으로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조금만 더 열린 마음으로 바라본다면 학생인권은 우리의 생각보다 빠르게 실현될 것이다.

학생의 눈으로 본 학생 인권

이 지 수(포항 대흥중 3학년)

좁아져가는 학생들의 자리

인권이란 “인간이면 누구나 가지는 천부적 권리” 를 말한다. 우리는 인간이기에 마땅히 이 권리를 주장할 수 있고, 침해당하였을 경우 되찾기 위한 운동을 할 수 있다. 과거에 비해 현재엔 인권 운동이 크게 신장되었고, 그 영향력이 커졌다.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그 영향력이 줄어드는 인권이 있다. 바로 학생들의 인권이다. 불붙은 입시 경쟁 속에서 학생들의 자리는 점점 더 좁아져가기만 한다. 학생들을 보호하는 학교에서도 학생들의 인권을 존중하는 모습은 찾아보기 힘들다. 학생들의 인권과 학교의 교권을 두고 무게를 재었을 때 무거운 쪽은 당연히 학생들의 인권이어야 하지만 현실에선 교권이 더 무겁다는 말이다. ‘학생들이 탈선 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다.’, ‘학생들의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한 정당 조치다.’ 라고 말하며 학생 인권을 무시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한다. 물론, 이는 좋은 의미를 가진 좋은 방법이다. 그러나 문제는, 선생님들의 입장에서만 그러하다는 것이다. 같은 상황에서 학생들은 이렇게 생각한다. ‘또 이렇게 되는군. 이제 이골이 난다.’ 아무리 좋은 의미를 가졌다 해도 실제로 그 좋은 의미를 실천하는 선생님들은 많지 않다. 학생들의 눈에는 당신들이 편해지기 위해 그들을 희생시키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학생 인권, 무엇이 문제인가

나의 생각을 적어내리기에 앞서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는 학생 인권을 알아보기 위해 여러 사이트에 검색을 해보았다. 결과부터 말하자면, 학생들의 주된 불만은 두발 문제와 복장 문제였다.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두발과 복장을 단속한다. 학생들의 학생의 본분인 학업에 더 열중할 수 있게 하기 위함이다. 이 역시 의미는 좋다. 그런데 왜 학생들은 반발하고 나선 것일까. 나의 생각은 이렇다. 학업에 열중해야하는 것은 우리 자신이고, 우리는 우리가 학업에 최고로 열중할 수 있는 두발과 복장을 잘 아는데 왜 교사가 단속을 하는 것인가. 공부를 할 때는 공부에만 집중할 수 있게 다른 것에는 관심을 쏟지 않아야하는데 지나친 규제는 오히려

려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것이 아닐까. 선생님들은 머리를 지나치게 길게 하거나 짧게 하는 것은 학업에 방해가 된다는 생각이신데, 자기에게 편한 방식으로 공부를 자유롭게 할 수 없는 것일까. 머리 길이와 복장이 공부에 얼마나 영향을 미친다는 것일까. 두발과 복장 단속으로 매일 아침마다 스트레스를 받으며 시작하는 것이 오히려 학업에 방해가 되고, 학교에 대한 반발심이 더 높아진다는 것을 모르시는 걸까?

학생 인권, 그 두 번째 문제로는 학교에서의 학생들의 의견 반영을 지적하고 싶다. 나는 지난 5월 반의 부실장으로서 학생회에 참석한 적이 있다. 학생들 사이 스승의 날을 맞아 준비할 이벤트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였다. 학생들은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었고, 개중엔 정말 참신하다는 생각이 드는 의견도 있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의견을 실행시키지 못하였다. 지금까지 해왔던 방식으로 하면 편하고 좋을 것을 왜 바꾸냐는 선생님들의 의견이 있었기 때문이다. 학생회를 열었던 당시에 선생님들께서 이미 모든 준비를 마쳐놓았었던 것이다. 우리는 그저 명목상 참가하였다는 말이 된다. 다른 친구들에게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며 이야기를 꺼내보았더니, 친구들은 이때까지 쪽 이렇게 해 왔으며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말하였다. 이는 비단 우리 학교뿐만이 아니었다. 학생들의 체력 증진을 위해 농구 코트를 설치해 달라고 하였더니 필요하지도 않는 특별실이 하나 더 생겼다는 학교도 있었다. 그 말을 들으니 더 이상 참여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졌다. 학생회가 무엇인가. 학생들의 의견을 자유롭게 말하고, 학교 측에서는 이 의견을 들어주는 것이 아니었던가. 언제부터 학생회가 이름뿐이었던 말인가. 지금까지 우리는 돌을 상대로 말하고 있었다는 것인가. 아무리 말을 해도 대꾸가 없으니 우리 스스로 참여권을 버리지 않았는가. 참여는 기본적인 인권 중 하나이다. 교사는 학생들의 참여를 격려하고 증진시키기 위해 노력해야한다고 배웠다. 하지만 배운 것은 배운 것 일뿐 실질적으로 학생들에게 돌아오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다음으로, 꼭 짚고 넘어가야할 문제가 있다. 입시 경쟁이 가열될수록 학생 인권은 무시된다는 것이다. 학생들에게 심한 부담을 주는 0교사와 보충 수업이 생기는 학교가 늘어나고 전국적 일제고사의 실시로 성적에 대한 압박이 심해지며 극단적인 결과로 학생들이 자살을 하기에 이르렀다. 학생들은 공부하는 기계가 아니다. 그러나 어른들이 학생들을 기계화시키고 있다. 학생들을 다 성장하지 못한 존재라고 인식하기 때문에 그 통제를 심화시키는 것이다. “너희들의 미래를 위해서야” 라고 말하지만 이러한 압력을 통해서 나아지는 것은 어디에도 없다. 학생들도 인간이다. 피곤함을 아는 인간이다. 기본적인 감정이 있으며 자신의 한계를 잘 알고 있다. 어른들은 이를 모른다. 그들에겐 학생들이 어디까지나 미성숙한 존재일 뿐이다. 그렇기에 학생들을 벼랑 끝까지 몰고 가 위협하는 것이다.

교사의 학생에 대한 체벌과 태도 또한 마찬가지이다. 학생들이 학생 인권에 대한 말을 꺼내면 버르장머리 없다고 체벌을 하기 마련이다. 앞서 말했듯이 학생들을 미성숙한 존재라고 보는 태도에서 오는 것이다. 당연한 권리를 당연하게 요구한 것일 뿐인데 돌아오는 것은 당연한듯한 체벌이니 학생들은 불만을 가지면서도 아무 말 못 한 채 고개 숙이기를 강요당하

며 살아가고 있다. 학생들은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가야 할까.

· 해결책

주위를 둘러보면 이러한 폭압적인 구조에 들고 일어나 항의를 하는 학생들이 있다. 이는 최근 미국 소 수입 반대 촛불 시위에 참가한 중고등학생들의 모습에서 보여졌다. 그들은 분명한 자기주장을 내세우며 미성숙하다고 여겨지던 모습을 타파하였다. 어른들은 예상치 못한 학생들의 반발에 놀라면서도 또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것들이.....' 한다. 역시 문제는 어른이다. 학생들에게도 인격이 있고, 그들만의 생각이 있음을 알아주고, 존중해주었으면 한다. 어른들의 말에 하나도 틀린 것이 없으며 학생들의 목을 조르지 말아주었으면 좋겠다. 학생들에게도 의지란 것이 있고, 자존심이란 것이 있다.

학생들도 마찬가지로이다. 어른들의 말이라면 먼저 귀부터 막지 말고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며 양보할 수 있는 한 양보를 하며 타협을 봐야한다.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듣지 않는다거나 참여하지 않는 것은 학생들의 인권을 학생 스스로가 짓밟는 것이다.

서로 돕고 타협하며 스스로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나선다면 일말의 갈등 없이 해결할 수 있으리라.

[토론문 3]

경북, 포항 학교 현장의 학생 인권 역시 교문 앞에 멈추어 서다!

신 현 자(참교육학부모회 포항지회장)

■ 들어가는 말

전국의 상황과 다름없이 우리 포항에서도 크고 작은 학교 폭력, 왕따 등의 문제들을 겪고 있다.

왜 교육의 장인 학교 현장에서 이런 일 들이 끊임없이 일어나는가?

거의 폭력 수준인 교사의 체벌(?), 아이들 간의 폭행 및 왕따 그리고 학생의 수치심이나 모욕감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두발 규제 등 생활 지도에서 오는 마찰들... 게다가 꼭두새벽에 등교해서 온 세상이 다 잠든 후에야 귀가하는 우리 아이들에게 인권이란 어쩌면 하늘의 별보다도 더 먼 남의 얘기처럼 들릴지도 모른다.

사실, 학력 위주, 학벌 만능의 현 사회 안에서 우리 아이들이 일률적 야간 자율학습이나 보충학습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문제의식을 갖기를 기대하는 것은 무리일 것이다. 좋은 학교에 가려면 인권이요 자율이요 아침 밥 굶고 잠자지 말고 연속으로 시험 치르며 중·고등학교 시절을 보내야한다고 아이들 스스로 믿고 있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이다. 학생, 학부모들에게는 이런 청소년 인권 전체에 대한 개념보다는 학교 생활내의 폭력 및 체벌 각종 규제에 대한 인권침해에 대한 문제의식이 더 심각하다.

이런 맥락에서 학력 위주의 학교생활에서 야기되는 인권 침해에 대한 문제는 다른 토론자(학생 당사자)들의 토론에 맡기고 우리 학부모회에 상담의뢰 되었던 사례들을 중심으로 토론을 전개하고자 한다.

최근 들어 정부와 한나라당이 당정협의를 거쳐 교원평가 결과를 인사에까지 반영하는 교원 평가 안을 법제화한다고 발표함으로써 교원평가제 논란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2000년 '교직발전종합방안' 수립 시 교원평가 제도의 도입이 검토되기 시작한 이후, 각 이 해당사자 간에 첨예한 입장 대립을 보여 왔던 상황에서 그간 우리회는 기본적으로 교원평

가에 찬성하는 입장을 표명하면서도 그 구체안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일정한 견해 차이를 보이며 꾸준히 논의를 전개해 왔다. 학부모들이 교원평가에 찬성하는 것은 소위 '부적격 교사'를 해결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 때문이며 아직도 그러하다고 할 수 있다.

교원평가가 학생과 교사의 인간적 관계를 붕괴시켜 결국 학교를 황폐화시킬 것이라는 교원단체들의 입장과 교사의 교육력과 전문성 향상을 위해 필연적으로 도입되어야 한다는 극단적 입장들이 대립하는 가운데 우리는 학부모 입장에서, 더 정확히 말해 학교에 다니는 자녀들의 입장에서 우리 교육문제를 바라보고 그 해결 대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전제에서 교원평가 논의를 계속해왔던 것이다. 평가에서는 의도하든 안 하든 폭력교사, 부적격교사 문제가 일정하게 드러날 수밖에 없다. 많은 학생들이 문제교사로, 배우고 싶지 않은 스승으로 지적한 교사에 대해 학교가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의 문제는 교원평가와 관련해서 피해 갈 수 없는 민감한 사안이며, 많은 학부모와 학생들이 교원평가와 관련해서 가장 주의 깊게 지켜보는 현안 문제이다. 한 학교 안에서 한 사람의 폭력 교사가 많은 학생들에게 끼치는 부정적 영향력은 지대하다. 많은 국민들이 학창시절 폭력 교사로 인해 고통 받은 경험을 가지고 있고 그럼에도 2, 30여년 전이나 지금이나 여전히 폭력교사들이 학생들의 인권을 유린당하는 억압적 학교풍토가 온존해 있다. '가재는 게 편' 이라고 학교는 항상 폭력교사를 감싸고만 돌아 폭력교사들은 여전히 아이들 위에 군림하며 폭력을 행사하고 있다. 폭력교사는 폭력을 아이들에게 가르친다. 폭력을 당연시하는 잘못된 가치관을 양산하는 폭력교사는 이제 더 이상 교단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것이 국민적 바람이다. 우리 아이들을 더 이상 성폭력과 물리적 폭력, 언어폭력에 내 맡길 수는 없는 것이다.

'우리 아이들이 보다 인간적이고 민주적인 학교 문화와 환경 속에서 건강하고 행복하게 교육받는 그 날'을 꿈꾸며 지난 9년 동안 즐기차게 노력해 왔던 단체로서 우리회는 학교 교육 안에서 우리 아이들에게는 교육 행복권을, 그리고 교사들에게는 학부모와 학생들로부터 존중 받고 존경 받는 스승의 모습을 기대하며 이 토론을 진행하고자 한다.

■ 교육환경의 현주소

촛불집회에서 드러났듯이 학생들은 이명박 정부의 교육시장화 정책에 분노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은 ① 고교 다양화 300 프로젝트 ② 영어 공교육 완성 프로젝트 ③ 3단계 대입자율화 ④ 기초학력, 바른 인성 책임 교육제 ⑤ 맞춤형 학교지원 시스템 로 입시경쟁을 강화시키는 교육이다. 지난 정부의 속도조절 입시 경쟁강화 교육시장화정책보다 더 노골적으로 대입을 넘어 고등학교 입학과 국제 중 설치에서 보이듯이 중학교 입시도 부활될 상황에 처해 있다.

4.15 학교자율화조치로 0교시와 보충수업이 뜰을 치고 있다. 심지어 초등학교까지 실시되는 일제고사는 초등학교에서 수행평가 위주로 평가한다는 교육과정에 위배되게 4회 지필평가가 부활하고 있으며 심지어 월말고사까지 부활하고 있다. 그리고 전국적 일제고사의 도입으로 성적에 대한 압박이 강화되고 반응이 더 민감해져 성적비판 자살이 나타나기도 했다. -발제문 중에서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등 국제인권기준 및 헌법에서도 인정하고 있듯이 학생, 즉 아동은 교육과 보호의 대상이지만 인권의 주체이기도 하며 학교는 아동이 한 인간으로서 존엄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 권리를 적극적으로 존중하여야 한다.

물론 학교도 하나의 사회인 것은 분명하며 학교는 학교 본래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서 질서가 필요한 것도 사실이다. 구성원 상호간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기 위해서 지켜야 하는 규칙도 있으며 이러한 규칙들은 학생 한 개인의 권리를 제한할 수도 있다는 점 또한 고려되어야만 한다는 것도 알고 있다. 이 토론에서는 이러한 지점을 침해하지 않으면서 논지를 펴도록 노력하였다.

학교에서 지켜야 하는 규범은 교육활동을 위한 것이거나 그 자체가 교육적인 것도 있는 것이 사실이다. 또 학교 구성원 상호간에 지켜야 할 절서를 위한 것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규범은 그 제정의 절차의 정당성과 내용상의 정당성을 모두 필요로 합니다. 학생을 주요한 구성원으로 하는 학교사회에서 학생이 규범제정과정에서는 소외된 채 단순히 제시된 규범을 지키는 의무만을 지닌다면 학생들의 자발적 동의를 받기 힘들 것이다. 아울러 학생들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규범이 있다면 교육적 목적과 질서유지의 목적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최소한에 그쳐야 할 것이다. 기본권의 본질까지 제한하는 것은 금지되어야 한다.

<참 고 >

- 위원회는 체벌이 학생들의 신체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이고, 유엔 아동 권리위원회가 처벌적 태도보다 대화와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교육공동체가 회초리를 들지 않고도 교육적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을 밝혔다. 또한 체벌의 근거가 될 수 있는 「초·중등교육법」과 동법시행령 관련 조항을 교육인적자원부에서 개정해 체벌금지를 적극적으로 수용할 것을 권고했다.
- 위원회는 또한 학생의 학교운영 참여와 관련해 "학생도 학교운영의 책임 있는 한 주체이므로 학교운영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초·중등교육법」 제31조의 개정을 권고했다.
- '학교폭력'문제에 대해서도 "교사, 학부모, 학생 모두에게 폭력예방 의무

를 부과하고, 폭력예방 교육과정을 두어 인권의 보장과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치유할 수 있도록 학교내에 '인권상담기구'를 설치 운영"할 것을 권고했다.

- '현장실습 중 본인의 부주의로 발생한 사고는 본인이 책임진다'고 규정한 실업고 예시 안에 대해서도 "물적 손해에 대한 학생의 책임규정을 강조하기 이전에 학교 당국에게 철저한 정보수집과 학생의 안전보장에 대한 의무를 부과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 2002.09.09 .국가인권위원회 권고 -

교육인적자원부는 학생인권 문제와 관련한 우리 위원회의 의견에 기본적으로 공감하지만 차별의 근거가 되는 「초·중등교육법」 제18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31조제7항의 개정 권고에 대하여「교직원단체, 관련 시민단체, 시·도 교육청 및 학교 교육현장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관련법령을 개정하는 문제는 현실적으로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므로 좀 더 신중한 연구와 검토가 필요"하며, 또한 학교 운영위원회에 학생 참여를 위한 「초·중등교육법」 제31조 개정 권고와 관련하여 "학생들은 미성년자이며 신체적·정신적으로 미성숙한 자임을 들어 학교운영에 참가하는 문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보내왔다.

- 2002년 11월 19일 교육인적자원부 답변 내용

또 하나 지적할 부분은 학생들의 인권을 거론하면 교사들의 교육권이 침해 당한다고 여기는 시각이다. 학생들의 인과 교사들의 권한을 서로 충돌하는 개념으로 보기 보다는 서로 보완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학생들의 인권을 보장하는 학교의 행동은 그 자체가 바로 교육행위일 것이다. 자신들의 권리가 학교로부터 보장되는 것을 체험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민주시민교육의 주요한 한 부분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자신이 권리의 주체이며, 선생님이나 다른 학생들 역시 권리의 주체이므로 주위 사람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자신의 권리를 절제하는 행동을 배우는 것이 바로 학교에서 해야 할 교육일 것이다.

자신의 권리주체가 아니면 책임의 주체로도 설 수 없다.

지금 우리 학생들은 권리의 주체가 아니므로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감을 느끼지도 못하며 그냥 '말 잘 듣는 학생' 이 최고의 덕목인 가치를 배우고 있다. 이렇게 자라 성인이 되어서도 '말 잘 듣는 국민' 으로 살아가게 만드는 것이 과연 우리 교육의 목적인가.

■ 나가며 - 포항의 학생 인권 실태와 제언

지난 일 년간 포항의 각 급 학교에서도 끝없이 학생 인권과 관련한 문제들이 터져 나왔다.

■ 사례

다음은 학부모상담실에서 들어온 교사 체벌에 관한 사례이다.

1) 고 1학부모들입니다. 저의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의 한 선생님이 상습적으로 아이들을 체벌하는 데 그 수준이 완전히 폭력 수준입니다. 이를 시정하기 위해 몇 차례학교에도 찾아가고 교감선생님과 면담도 해봤지만 그러고 나면 오히려 체벌이 더 심해지더군요. 급기야 아이를 상담실에 데리고 들어가 문을 달아놓고 머리를 끄집어 때대기를 치고 쓰러진 아이를 발로 짓밟기까지 했습니다. 그 후에 아이가 집에 가려고 나가는데 운동장까지 쫓아와 전교생이 다 내다보는 가운데 아이를 다시 때대기를 치고 일어서려는 아이를 발길질로 쓰러뜨리고 폭행했습니다. 이 일로 아이는 머리카락이 한 움큼이나 빠지고 전치 2주의 상처를 입었습니다. 학교에서는 이 선생님이 실력 있는 교사라서 아이들의 수능 준비 등으로 해임할 수 없다고 합니다. 우리 학부모들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2) 포항 시내 평준화 지역 D고등학교에 배치를 받았는데 배치교사를 2번 쳐서 우열반 편성을 한다고 합니다. 평준화 지역에서 우열반 편성이 합법적인지 알고 싶고 학력차 때문이라면 학력에 따른 이동식 수업이 더 교육적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우열반 편성은 학생 상호간에 차별감이 생겨 교육적이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올바른 답변 기다립니다.

3) 중 1 엄마입니다. 입학이후 시험기간 방학 빼곤 거의 제시간에 하교하지 못하고 있어요. 단체 벌 때문입니다. 늘 이유는 있습니다. 떠들어서 휴지를 아무렇게나 버려서 친구가 싸워서 등등.. 그런데 벌이 운동장 10바퀴 오리걸음, 의자 들고 4-50분 서 있기, 원산폭격, 죽도로 맞기, 더운 여름에 에어컨 끄고 책상위에 꿇어 앉아 허수아비 자세로 40분간 있기, 벌 받으면서 들어야하는 온갖 언어폭력 [그러니 너희 부모가 이혼하지] [콩가루 집안이 따로 없네]. 아이들 체력운운 하면서 아이들 벌주고, 문제를 제기 하면 적당히 둘러말하면서 피해가고. 고스란히 당하

는 우리 아이들은 어디에 하소연해야 하나요.

4) 초등학교 3학년 학부모입니다. 우리 아이의 담임선생님이 문제가 많으십니다. 아직 어린 아이인데도 성추행을 일삼고 폭언과 체벌이 폭행 수준이고 수업 시간에는 수업을 하지도 않고 잠을 자거나 컴퓨터로 고스톱을 치고 갭같이 성인 사이트를 열고 보기도 한다. 게다가 급식과 청소를 학부모들에게 요구하고 학부모들이 있을 때도 수급자 등 저소득층 아이들 명단을 교사 책상 밑에 넣어놓고 그 아이들의 가정환경을 들먹이며 특정 아이들만을 괴롭힙니다. 이런 선생님이 어떻게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라고 할 수 있는지요? 우리 학부모들의 힘만으로는 해결하기가 힘듭니다. 도와주세요.

위의 상담사례에서 드러나듯이, 아직도 우리 아이들은 오늘도 여전히, 권위주의적이며 비민주적인 학교 풍토 속에서 일부 교사들에 의한 물리적 폭력과 성적 만능의 시각에 노출되어 고통당하고 있다.

오늘날 우리 아이들이 몸담고 있는 학교현장을 들여다보자. 그간 우리는 아이들이 학교생활에서 겪는 고통과 질곡을 풀어주고자, 보다 학생이 존중되는 인간적 교육환경을 만들어 주고자 고군분투해 왔다. 오늘보다는 내일이, 그리고 언젠가는 아이들이 학교 안에서 행복하고 교육을 향유할 날이 올 것이라 믿고 꿈꿔 왔다.

그러나 오늘의 교육현실은 어떠한가. 지금 우리 아이들은 날이 갈수록 더욱 치열해지는 입시 전쟁 속에서 고통 받고 있다. 무한 입시경쟁과 극심한 취업 경쟁, 더욱 교묘하고 복잡다기(複雜多岐)한 입시 전형안들이 난무하는 가운데 학생들은 이중, 삼중의 경쟁 속에서 허우적대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살인적 입시중압감으로는 부족한 것일까. 위의 상담 사례들이 보여 주듯, 우리 아이들은 성적 경쟁 이외에도 물리적, 언어적 폭력을 행사하는 교사, 부적격교사에 노출당한 채 살아가고 있다.

이른 새벽부터 별이 총총한 밤늦게 까지 몸담고 생활하는 학교 안의 비인간적이고 권위주의적인 문화가 아이들을 질식시키고 있는 것이다. 여전히 수직적 하향적 학교 풍토 속에서 대다수 학생들은 인격적 존재로 존중받지 못하고 피동적 존재로 사육당하고 있다. 토론과 대화, 상생과 협력이 사라진 자리에 지시와 복종, 굴종의 학교문화가 자리하고 있다. 많은 학생들이 학교를 자신들을 옥아매는 억압기제로 느끼고 있다.

학부모들의 치맛바람과 버릇없이 자란 아이들이 많은 교사들을 지치고 힘들게 한다고들 말한다. 교사들이 안하무인, 예의 없는 학생들 때문에 학생 지도가 어렵고 교사직의 보람을 잃어 간다고 토로한다. 한 두 아이를 키우며 자식을 버릇없이 키운 학부모들이 오늘날 반성해야 할 점이 많은 줄 안다. 따라서 학부모들이 올바른 가정교육을 위해 부단히 반성하고 노력해야 한다는 전제에 동의하면서도 그러나 우리가 여기에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기본적인

로 한국의 학교문화가 극도로 권위주의적이고 패쇄적이며 상명하달식의 학교문화를 뿌리 깊게 온존시켜 오고 있다는 사실이다. 학교장이 교사 위에 군림하고, 교사가 학생 위에 군림하는 비민주적 학교문화! 교장과 교사 사이에 토론과 대화의 장이 없으며, 교사와 교사, 교사와 학생 사이가 단절된 학교 문화 속에서 아이들은 학교를 가고 싶지 않은, 하루 빨리 떠나고 싶은 감옥이나 수용시설 쯤으로 여기고 있다. 가고 싶지 않은 학교에 매일, 그것도 새벽부터 밤까지 본인 의지와는 상관도 없이 책상머리를 지켜야만 하는 우리 아이들이 너무나 불쌍하고 안타깝다.

더욱이 학교교육을 통해서든, 사교육을 통해서든 우리 아이들은 세계에 유례 없을 만큼 학력 위주의 성적 경쟁에 내몰리고 있으며, 학력이 모든 것에 우선하는 최고 가치로 여겨지는 한국 사회에서 행여 교원평가가 학력 중심의 학교 문화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진행되는 것은 아닌지 심히 우려된다. 우리 아이들이 끝없이 학력 신장을 강요당하는 가운데 학교 현장에서는 교사와 제자, 친구와 친구 사이의 상호 이해와 존중, 배려와 협력은 메말라가고 수직적 일방적 가르침과 지시, 무한경쟁과 질시, 폭력이 난무하고 있다. 학력 증진의 대명제가 가장 교육적으로 존중되어야 할 가치인 인간과 인간, 스승과 제자 간의 참다운 관계를 처절히 차단하고 파괴하고 있기 때문이다. 오늘날 우리 아이들은 학교를 아름다운 미래의 삶을 준비하는 참교육 현장이라고 여기지 않는다. 아이들은 학교에서 탈주하고 싶을 뿐이다. 현 정부 들어 전국 규모의 일제고사 실시, 학교자율화로 나타나는 강제보충수업과 0교시 수업 등으로 학생들은 더욱 학력 경쟁에 내몰리고 있으며 따라서 자신들의 문제 입에도 불구하고 인권따위(?)를 찾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이다. 물론 이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며 쉬이 오늘 내일 해결 되어질 문제도 아니다. 학교 현장에서 교사에게 폭행, 성 추행, 언어폭력에 일상적으로 노출되어 있는 아이들, 학생들 간의 폭행이나 왕따 문제가 일어났을 때조차 제대로 된 조치 없이 피해자가 가해자가 될 수밖에 없이 방치되는 현실, 생활 지도를 명분으로 아이들의 머리를 강제로 자른 교사와 그 스승을 고발하는 학생들, 자기 학생이 폭력에 노출 되어 있음을 알고 적극적으로 조치했던 교사가 '별난 인간'으로 몰리는 사회... 한숨이 나오는 작금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한숨만 쉬고 있을 수는 없는 노릇이 아닌가. 우리의 미래인 우리 아이들을 우리가 지키지 않는다면 우리들 자신의 미래가 암울 하다는 점을 되새겨야 할 것이다.

이제 우리는 각 급 학교의 생활 규정들을 수합하고 분석해 발표하는 작업까지 진행 된 이 뜻 깊은 토론회를 기점으로 '선진 일류 도시 건설'을 외치는 포항에서 적어도 학교만큼은 마음 놓고 보낼 수 있도록 기본적으로 학생 인권이 보장될 수 있는 조례 제정 등에 앞장 서야 할 것이다.